

第三篇 文化

第一章 社會經濟
第二章 教育

第一章 社會經濟

第一節 일제의 농업수탈정책

일본제국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첫째는 식량공급 기지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농토의 수탈이며, 셋째는 그들의 공업발전을 위한 공업원료국으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침략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한 수법과 잔인무도한 방법을 통하여 한국인의 자원과 생명을 무수히 빼앗아 갔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농촌과 농업을 부흥시킨다는 미명하에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농민의 토지를 교묘하게 수탈하였으며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무수히 일본으로 가져갔다. 한편으로 농산물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는데 이 역시 일본의 식민정책에 의거 강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제국주의의 악랄한 식민지 농업정책의 요체를 고찰하기 위하여 그들이 한국에서 자행한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려고 한다.

1.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의 배경을 보면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동년 11월 17일 강압적으로 소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에는 통감부를 설치하여 식민정책을 전면화하기 시작하였다.

삼권을 독점한 일본상업자본은 미국, 대두, 원료 등 농산물을 매수하고 일본에 수출하는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생산 수단인 토지자체를 소유 지배하는 것에까지 손을 뻗쳤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대규모로 토지를 사유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 즉,

- 가.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는 점.
- 나. 토지사유권이 관습상 확립되었으나 법률에 의하여 완전히 보장된 物主의 배타적 사유권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 다. 토지의 상품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라. 일본인의 토지매수에 대하여 한국의 농민뿐만 아니라 봉건적 권력자의 양반귀족까지 완강히 반항하였다는 점.

이러한 제약속에서 일본 상업자본의 토지점유는 점차 진전되었으나 그것은 조선의 국법상 여전히 위법이었으며, 법률적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토지매매와 점유의 합법화가 일본 상업자본에 의하여 강력히 요청되었다.

2.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토지조사 사업은 우리나라의 여러부문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요한 법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유관계로 확립하려는 한편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단순한 경작권 마저 박탈당하여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표-1〉에서 보면 농민의 소작농화 경향은 자작농보다 저항력이 미약한 자작겸 소작농으로 현저하게 전락되었다.

〈표-1〉 農民의 耕作 傾向

年 次	自 作 農		自 作 兼 小 作 農		小 作 農		合 計	
	戶 數 (1,000戶)	%	戶 數 (1,000戶)	%	戶 數 (1,000戶)	%	戶 數 (1,000戶)	%
1913-1917平均	555	21.8	991	38.8	1,008	39.4	2,554	100
1918-1922平均	529	20.4	1,015	39.0	1,098	40.6	2,602	100
1913-1927平均	529	20.2	920	35.1	1,172	44.7	2,621	100
1928-1932平均	497	18.4	853	31.4	1,360	50.2	2,712	100
1933-1937平均	547	19.2	732	25.6	1,577	55.2	2,856	100
1938	537	19.0	719	25.3	1,583	55.7	2,841	100

朝鮮의 經濟(東京 日本評論社, 1942) 參考資料.

둘째, 일본회사 및 일본인 지주등에 의한 토지집중이 급격히 진행되어 1931년 동양척식회사가 소유하게 된 토지및 삼림은 12만3565정보에 달하였다. 〈표-2〉

또한 일본인들은 그들의 우세한 자본력을 배경으로 대 토지소유자의 수와 소유면적에 있어서 한국인을 압도하게 되었고, 식산은행등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본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간 토지면적까지 합하면 전 경지면적의 절반이 일본인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표-2〉 東拓所有地의 增加推移

年 度	田	畠	其 他	合 計
1910	2,330.6	8,643.8	91.1	11,035.5
1911	6,502.3	18,763.4	1,554.1	26,819.8
1915	18,753.7	46,642.1	4,748.2	70,144.0
1920	19,405.1	51,149.7	6,743.0	77,297.1
1925	19,078.6	50,992.7	15,718.8	85,790.1
1929	17,459.1	48,226.0	30,594.6	96,279.7
1930	16,944.4	46,682.5	41,709.1	105,336.8
1931	16,887.8	46,584.8	60,092.8	123,565.4

朝鮮總督府統計 年表 〈1933年 3月〉 參考資料.

세째,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시키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종래의 수조권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조한 수확물의 절반공납을 절반이 사 소작료로서 지불 시켰으며 이로써 반봉건적 소작관계가 창출되었다.

1933년 당시의 소작료는 전쟁산물의 50%에 달하는 고율 소작료였던 것이다.

1930년 조사된 지불방식별 소작료율은 〈표-3〉과 같다.

小 作 料 率 比 較

구 分	畠			田		
	최 고	보 통	최 저	최 고	보 통	최 저
定租 (벼)	90%	50%	39%	80%	50%	47%
打租(보리밀)	79	60	44	65	69	43
報租 (잡곡)	80	55	50	75	55	50

3. 일제 하의 농민 실정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농업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토지의 잠식은 물론 농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식민 이익의 증식에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1910년에 시작한 토지조사사업이 마무리되자 일제는 제1차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여 1920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농지개량과 농사개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적으로는 일본의 농업사정 때문이었다.

그들은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공급받기 위하여 산미증식을 꾀하였고, 식민조선에 일본인 농업이민을 위한 준비작업과 그들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 당시 조선총독부 농정과장으로 지냈던 「湯村辰二部」의 반도 농촌행정의 회고에서 보면 그들은 농사개선에 별로 치중하지 않고 농지개량에 역점을 두었다.

당시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인들이었으므로 채찍질을 하지 않는 한 생산량을 올리기는 힘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때 그들은 수리사업에는 치중할 수 없었는데 그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농민의 노동력을 이용할 계획으로 공사비를 적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제1차 산미증식계획은 시작 6년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에 농토 9만정보가 수리화되었는데 농민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둘째라고 하더라도 수리조합설치 비용을 각출하고 수세 등으로 농민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농지가 수리화로 개량되면서 그 토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이민지주가 소유하게 하였고, 그 결과 농민 대다수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20년 중반까지 심화되어 일본인 중에서도 비판하는 자가 있었다.

4. 일제 수탈하의 농민경제

1930년대의 세계적 대공황으로 인하여 일본자본주의도 커다란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1930년에 이르면서부터 일본의 물가는 생사, 면사포 등의 주요 수출품을 비롯하여 모든 물가가 일제히 급락하였고 무역 위축의 격감은 일본의 금유출을 증가시켰고, 금(金) 준비의 급격한 감소는 1931년말에 이르러 일본자본주의로 하여금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공업생산은 대폭적으로 저하되었으며 체불노동자의 대량고용 등으로 인하여 노사간의 투쟁이 침예화되었다.

또한 농업에 있어서도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인하여 농촌경제의 파탄이 속출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농업공황과 우리나라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춘궁농가 호수가 <표-4>에서와 같이 전체 농가의 약 50%에 달하였다. 특히 소작농에 있어서는 2/3 이상의 춘궁농가가 있었다.

<표-4> 春窮農家戶數表

地域別	自作農		自作겸小作農		小作農		合計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남한 7도	50,000	22.4	220,000	40.0	921,000	72.8	891,000	55.5
북한 7도	42,000	14.5	103,000	32.8	216,000	61.3	361,000	36.0
전국	92,000	19.4	323,000	37.5	837,000	68.1	1,521,000	48.3

第二節 도척면의 농업정책

농업의 중요한 목표는 증산을 통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의 지속적 향상 및 농촌개발에 의한 복지농촌의 건설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시책의 노력은 많이 경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이 있었다.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개발계획에 관련한 농업부문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바 있다.

- ①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연평균 4%의 높은 성장을 이룩한다.
- ②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이룩한다.
- ③ 농어민 소득증대를 계속을 추진하도록 한다.
- ④ 농어촌에서도 도시생활 못지 않게 문화적이며 복지시설이 갖추어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게 한다.

이러한 기본목표 하에서 추진된 구체적인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유통시책의 강화이다.

농산물 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법의 통폐합의 바탕에서 농수산물 유통

第三篇 文 化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1976년 12월에 제정된 바 있고, 제정목적은 민간의 농수산물 도매기능을 경제적으로 운영·조정토록하며 농수협공판장의 도매기능을 강화하고 비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코자 함에 있었다. 그밖에도 생산의 집단화 및 단지화를 통한 대량생산 및 대량출하기반을 조성하며 농협의 산지출하체제의 확립을 통한 산지유통체제의 확대강화 하에 농업발전을 추구하였다.

둘째, 농업금융확충을 통한 농업발전정책이다.

이익보상 의존방식의 종전제도를 개선 운영하며, 중장기 농업자금의 대폭적인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개발자금설정을 1977년 5월부터 별도 설치 운용한 바 있으며 새마을 소득종합개발사업의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재정자금과 농협자금의 운영을 1978년부터 종합개발사업의 바탕에서 실시한 바 있고, 동시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지원을 정부대출금, 지방자치단체, 국민주택자금, 농협자금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셋째, 새마을 소득 종합개발사업의 전개를 통한 농업발전정책이다.

그동안의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은 특정품목과 개별농가를 대상 지원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성과가 부진하였고, 지역내 부존자원의 합리적 이용측면에서도 미흡하였다.

이는 계획수립과정과 추진체계가 중앙에서 조정, 하달되는 계획방식이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반성과 각성 하에 새마을 소득종합개발사업을 1977년부터 전개하였고 새마을 소득증대 특별사업을 확대개편하여 그 추진주체를 단위조합으로 일원화하여 전개시켰다.

넷째, 농정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농업및 농촌개발 정책이다. 중장기 식량정책과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정책 등에 관한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농어촌문제 등 사회문제 연구사업, 농어촌 여론조사 및 기타 교육훈련사업을 주요 임무와 역할로 하는 농정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립이 1978년 4월에 있었고 산물의 수매 및 수입비축 그리고 수매 수입한 농산물의 보관 및 시장조사나 가격안정사업을 모개하는 가교체로서의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이 농어촌개발공사내에 1978년 8월에 설치되었으며 조합원에 대한 생산과 금융지원 그리고 축산물 유통부문에 대한 가공 등의 지원을 위한 축산농민의 자조단체로서의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1981년 1월에 설치 발족됨에 따라서 이들 농정지원체제의 강화 하에 농업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모색이 있게 되었다.

1. 최근 한국농업의 문제

① 농업문제를 보는 시각

우리 나라의 농업은 일제하에서는 식민국 일본의 식량과 원료의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느라 농업생산의 성과가 축적될 여지가 없었고, 식민지정책에 의하여 발전의 길이 봉쇄되었다. 그후 해방과 더불어 일제가 물러가고 정치적 자주독립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민족의 지상파제로 삼자, 농업은 국민경제형성의 일환으로서 산업간의 유기적 연관을 가지고 발전되어 농업이 가지는 국민경제에 대한 기능을 심분 발휘해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하의 왜곡된 식민지 농업구조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채 대부분을 은존시켜 왔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는 무너지고 농업문제는 심각한 국면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인 영세적 소농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민경제 속에서 기능적 발전이라는 과제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자주적 경제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60년대 이후 정부는 소농경제의 터전 위에서 국가경제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농업정시에로 방향을 굳히기 시작하였고 농업을 토대로 하는 경제자립의 의지가 희박해져 갔다.

초기의 국제경제개발은 점점 성장, 발전하며 외국원조와의 연관 속에서 더욱 더 고도화되어져 갔는데, 고도화된 의존형 경제발전은 국내자원, 개발형의 경제개발보다는 외국의 자본 기술, 원료에 의존하고 이를 외국에 팔아야만 재생산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결국 이미 악화된 국내시장에서는 판로를 구할 수 없어 심각한 대외 의존형으로 되었다.

이같은 외향적 발전정책이 계속되려면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제품을 계속 구매해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우수한 제품을 계속 값싸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노임이 필수조건이 되고 아울러 농산물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소농경제는 이같이 고도화된 의존형 국가경제개발을 지탱하는 기지의 구실을 수행해 왔으나 농업이 이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화되자 비교 우위 이론에 입각하여 수입자유화 시책을 폐면서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농업정책의 추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농업문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구조의 근본적 개혁과 정책적 방향의 전환없이는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농업문제의 양상

최근 농업문제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최근 관심사가 되고 있는 영농후계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농업노동력, 농촌부채, 농산물수입문제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① 영농후계자 육성의 문제

영농후계자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느냐에 대해 학자에 따라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농업을 직업으로 택하기 위하여 영농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영농에 착수하여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장년들을 충칭한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영농후계자는 식량의 중요성의 증대와 과학영농의 수행을 위해 당연히 육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농사에 종사하기를 꺼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성하고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로 사회적인 면에서 영농후계자 육성에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직업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농업이란 직업은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청소년에게 별다른 매력을 주지 못한다. 이밖에도 농촌은 도시에 비해 아직도 보건 문화시설에 격차가 있고 교육환경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아 농촌보다 도시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실정은 농촌의 청소년 중 남성보다 여성쪽에서 심하게 나타나 농촌의 미혼여성들은 영농에 꿈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과의 결혼마저 주저하고 이촌현상이 급증함으로써 농촌청년들의 배우자 선정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영농후계자와 관련된 문제는 농업도 수지맞는 직업이라는 것을 농촌청소년에게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을 보면 농업생산원의 고가 농산물가격의 파동, 농산물유통구조의 미개화 등으로 농업경제진단과 설계가 불가능하므로 경제적 보수가 불안하다. 이 때문에 농촌청소년들은 영농에 종사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세째, 교육적인 면에서 영농후계자 문제는 농업의 장기전망, 농업 장단기 인력수급계획, 영농정착과정에 따른 단계별 특성 등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민후계자를 육성하고자 정부에서는 1980년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1985년까지는 20,944명에 평균 700만원씩 1,40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987년까지는 40,000명에게 2,806억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농어촌지도자와 선진농업자 육성을 목표로 출발한 이 사업은 농수산부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 농·수산업협동조합, 지방행정기관, 관련 민간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동체제

를 유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 후계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증대시켰고 농촌청소년에게 영농정착의지를 북돋우는 등 큰 파급효과를 기대했으나 성과가 부진하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보면, 후계자 사업 이후에 시설원예작목의 후계자들은 비닐하우스 면적이 적어도 500여평 가량 늘어나 평균적으로 900평 가량을 경영하고 있으며 그들 농가의 농업소득도 1980년에 비해 1982년에는 499만원으로서 250만원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축산작목(대부분 한우)의 후계자들은 후계자사업 이후에 한우를 약 5마리 가량 증식하여 평균 6마리의 성우를 기르고 있으며, 그들 농가의 농업소득도 1980년에 비하여 1982년도에는 432만원이 늘어났다.

이와같이 후계자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후계자들이 계획하고 기대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교육적인 성과를 보면 그들이 후계자로 선발됨으로써 농촌에서 영농생활에 대한 의지와 향토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강해졌으며 영농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그들 하나 하나를 성공적인 영농자로서 육성하고 그들을 조직화하여 지도력과 향토개발의 사명감을 계속적으로 배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촌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체세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1983년경부터 시작된 외국의 농산물 수입정책, 물가안정책, 농산물파이생산, 소 파동 등으로 영농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이 사업자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후계자들의 사기는 크게 위축되었다. 아무리 후계자들을 잘 지도한다 할지라도 농업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농산물 수급조절, 농산물가격의 보장 등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② 농가부채의 증가

오늘날 농가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더미가 커진다는 말이 있다.

1984년말 농가 호당 평균 부채 178만4천원은 대부분 농가의 상환능력의 한계를 넘는 액수이다. 지난 10년간 농가소득은 11.5배 증가한데에 반하여 농가부채는 45.8배나 늘어났다. 또한 부채농가호수도 전체가구 중 1971년 75.7에서 1983년에는 91.2%로 증가하였다.

농가의 빚은 그 성격상 계절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 모내기가 끝난 6월경부터 가을추수가 끝난 12월 사이에 많고 추곡수매후인 12~2월 사이에 가장 적다.

따라서 농수산부의 통계자료가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의 실태와는 달리 부채 액수가 대부분 적게 나타난다.

第三篇 文 化

또한 집계기관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농수산부보다는 농협중앙회의 자료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소득증가와 부채증가의 비율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1984년까지 4년간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26.6%인데 반하여 부채증가율은 107.0%였다.

절대액수에 있어서도 1983년대비 증가액이 소득은 42만원 증가했으나 부채는 50만원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한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1980년 12.6%에서 1984년 32.1%로 커졌다.

한편 농가호당 평균 가계수지 및 차입현황을 보면 1984년 농가소득 555만원 중 가처분 소득은 547만원으로 여기서 가계비 및 기타 지출을 차감한 농가 잉여는 116만원이다. 결국 농가부채 178만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리고 1983년의 농가부채 128만5천원 중에서 공채와 사채 비율을 보면 공채 67.2%, 사채 32.8%이다. 이러한 공사채의 비율을 경지규모별로 보면 경지규모 0.5ha미만의 농가가 사채비율이 40.6%로 높으며, 공채비율 74.5%로 나타났다. 즉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사채의 비율이 높아서 높은 이자의 부담까지 안고 있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살펴볼 수 있는데 소득의 불안정성, 자금지원의 부족, 복리·후생·교육비의 과다 등이다.

③ 기타 제반 농업문제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어온 농업문제 중 위에서 언급한 영농후계자문제, 농가부채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업생산력의 불균등발전에 따른 농산물의 과잉과 과소의 공존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농산물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가격폭락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 둘째, 농산물생산력의 광범위한 후퇴현상이다. 전체적으로 식량자급율이 저하되고 있고, 짚고 유능한 농업노동력이 대량유출되면서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여성화·겸업화가 진행되었으며 재배와 사육관리의 粗放化가 전진되고 있다.

○ 셋째, 농업경영의 불안정성의 심화현상이다.

지가의 등귀, 토지투기, 농지잠식 등으로 농지구입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가 곤란한 가운데 소작농이 증가하고 있고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등의 구입증가로 과잉설비투자가 발생하거나 경영비가 팽창하고 있으며 성장농작물에 대한 전문화가 진전된 결과로 재래농업이 사양화되거나 전통적 복합경영이 쇠퇴하여 농업경영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農·工간 불균형발전의 심화, 수입자유화 시책에 따른 농산물 수입의 증대, 가수지의 악화, 이농증가, 농업의 지위저하, 도·농간의 격차 심화가 악순환되는 것이 현단계 농업문제의 양상들이다.

3. 광주군 및 도척면 농업의 방향과 전망

앞에서 언급한 농촌문제의 외형적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농민들이 도대체 농사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농촌에 거주할 것인가 또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등으로 심각한 불안감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패배주의적 의식이 우리 농민에게 만연되어 이러한 상태가 오래 가면 우리 나라 농촌이 활력은 회생될 수 없을 만큼 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하루 속히 우리나라 농촌주민들이 좌절감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영농생활을 하려는 의욕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심각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큰 흐름은 민생안정을 통한 농민의 총 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농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숙되고 안정된 국민경제의 운영을 위하여 그 동안 한국경제 운영의 타성으로 되다시피한 “성장지상주의”的 정책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경제정책의 기본이념으로 삼아 농촌주민의 “삶”的 보전과 질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다원적인 측면에서 종합적 발전시책을 전개하여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은 그들에게 분담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산업과 지역간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 선진조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외국농산물의 선별적 수입
- ② 농촌공업화를 통한 農外소득증대
- ③ 농촌주민조직의 활성화
- ④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 ⑤ 농촌의 人間定住空間형성
- ⑥ 농촌의 복지증진 등이다.

도척면도 이러한 농촌개발의 방향을 토대로 중·장기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광주군 도척면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좋은 지리상의 특성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작목을 재배할 경우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광주군은 예로부터 밭이 많았다. 이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잘 나와있다. 지금도 밭농사를 부쳐서 거두어 들이는 이득이 논농사를 지어 거두어 들이는 이익보다 많은 편이다.

서울 땅에는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성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채소 따위의 밭갈이를 더해서 논농사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

그러다가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뚫려서 멀리 남쪽에서 나는 채소류가 헬값으로 서울 땅에 부려지자 밭농사도 전처럼 재미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실촌면과 도척면의 마늘은 맵기로 이름난 마늘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여 서울 인접지로서 도척지역의 유리함을 살려 많은 농가소득을 올려야 할 것이다.

1986년말 현재 각 면적(도척면)

總面積	52.33km ²	비율	100%
畠面積	5.79km ²	"	14.0%
田面積	5.32km ²	"	13.7%
林面積	38.29km ²	"	73.3%

도척면 곡물생산량(1991)

곡종별	면적	단보당수량	생산량	비고
미곡	545	419	2,283 M/T	
백류	5.2	206	2.5	
두류	127	114	145	
대두	95	122	115	
서류	7	557	39	
감자	2	239	(6)	
잡곡	9.9	196	19.4	
옥수수	(6)	(249)	(15)	

第三節 농촌지도사업

1. 정부수립후의 농촌교도사업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교도사업도 계승되었으나 일부의 무용론과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당시 교도사업 종사자들은 농업기술자대회를 열고 견의서를 관계요로에 제출하는 등 줄기찬 노력으로 1949년 1월 절충적인 기구개편을 보게 되었다.

즉, 농사개량원이 폐지되고 수원농과대학 大教部(대교부) 산하로 귀속되고 시험부와 교도부로 구성된 농업기술원이 새로 발족함에 따라 각도에 도농사 기술원이 생기고 군농사 교도소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다.

1949년 농지개혁이 시행됨에 농촌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6·25동란으로 모든 농사교도사업은 1951년을 기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성립에 따라 농사교도사업의 재건도 추진되었다. 1982년 「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회」이 초빙한 국제식량농업기구 사절단은 한국의 농업·임업·수산업의 부흥발전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교도사업에 유익한 견의를 함으로써 한국정부와 지도층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한편 본 사업진흥을 위하여 1953년에 25만불의 예산을 세우고 교도사업관계기술자 11명을 미국에 파견하여 훈련시키는 동시에 지도용물자도입 등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전개하였다.

1953년 12월 29일 농림, 내무, 문교, 사회, 보건등 5부 장관 명의로 농업교도사업 실시에 관한 「통첩」을 시달하여 읍·면에 농업지도소를 군과 도 및 중앙에 각각 농업교도위원회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1954년 1월 대통령령 제863호로 농업기술원의 「교도부」를 삭제하였다.

1955년 3월 농림부 농정국에 농업교도과를 새로 두고 1956년 3월 6일 대통령령 제1136호에 의하여 각도 산업국에 농업교도과를 시·군에 산업과에 농업교도계를 두게 되어 광주군의 농업교도계장에 체상범씨가 보직되어 교도원 1명과 함께 농업교도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2. 농사원의 발족과 농사교도소

1956년 한국정부와 미국원조당국간에 「농사교도사업발전에 관한 협정」이 성립되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① 농사교도사업의 기구를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 ②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백한 행정계통을 수립하며, ③ 소요예산은 국회의 예산조치에 의하여 충당하고, ④ 농사교도기관에는 농민을 위하여 비정치적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현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재를 배치한다는 것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협정과 미 미네소타대 농과대학의 교도국장 가정과장 일행의 시험기관과 교도기관을 일반행정기관에서 독립시켜야 된다는 메세지 보고서다. 농림부와 주한미국경제협조처는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끝에 법안작성에 전력하여 같은해 9월 국회 농림분과위원회와 농림부 및 농업국 삼자회동으로 19차에 걸친 회의를 거듭한 끝에 1957년 1월 29일 농사교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2월 12일 법률 제435호로 공포되었다. 이어 같은해 5월 28일 대통령령 제1275호로 농사원직제가 공포되고 6월 15일 권농일을 계기로 수원에서 농사원 개원식을 갖게 됨에 따라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에 광주군 농사교도소가 개원되면서 초대소장에 채상범씨가 취임하고 농사교도원 2명, 생활개선교도원 1명으로 광주군 농사교도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적은 인원이지만 농사지도, 청소년지도, 생활개선지도, 협동조합교육을 개인접촉, 집단접촉, 대중접촉 등의 다양하며 철저한 민주적 교육방법으로 훈련하였기 때문에 군내 부락 구석구석까지 교도활동이 고르게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농민의 이해는 증진되어 교도원의 태도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농민 스스로가 교도원에게 여러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자발적 학습단체인 4H구락부, 농사개량구락부가 군내 곳곳에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교도사업의 현신적인 공로라 할 수 있다.

1959년 말 농민의 높아진 인식에 힘입어 각면까지 지소를 설치하려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다가 4·19혁명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1961년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대폭적인 정부기구개편에 따라 군농사교도소는 군 산업과의 한 계로 편입되고 말았다.

따라서 다시 옛날과 비슷하게 후퇴하고 말았으므로 반대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3. 농촌진흥청과 농촌지도소

농사원이 발족한 뒤에도 농민에 대한 농사교도기관의 전담지도가 되지 않고 농림부의 각국, 도의 산업국, 시·군의 산업과 읍·면의 산업계 등 일반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개발기관, 수리조합 및 협동조합 등에서도 독자적으로 농사지도, 생활개선, 모범부락육성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도체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혼란과 비능률이 초래되었다.

이에 지도체계의 일원화는 물론 농촌지도주관처의 행정기구로부터 독립을 모색하던 중 1962년 2월 17일 박정희 의장의 지시에 대한 내각안을 수정하였으며 3월 21일 농촌진흥법이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을 기하여 농촌진흥청 발족과 함께 광주군 농촌지도소가 광주군청의 사업소로 독립하면서 인사권은 농촌진흥청이 갖게 되었고 전문인력관리와 일관된 사업감독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1963년 10월 5일 각령 제1595호에 의한 직제 개정에 따라 초월, 실촌, 퇴촌, 동부에 지소를 두어 지소장과 지도원 1~2명을 배치하였고 1975년 1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읍·면에 지소를 두고 지소마다 독립된 청사를 두게 되어 우리 도척면에도 1975년 1월에 독립된 청사를 도척면 노곡리 58-14번지 면사무소 청사아래에 청사를 신축하여 지소장 1명과 직원 2명을 배치받아 농촌지도의 일선역할을 담당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박정희 의장의 지시

1962년 2월 17일 박정희 의장의 지시에 대한 내각안을 확정하였으며 3월 21일 농촌진흥법이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을 기하여 농촌진흥청 발족과 함께 광주군 농촌지도소가 광주군청의 사업소로 독립하면서 인사권은 농촌진흥청이 갖게 되었고 전문인력 관리와 일관된 사업 감독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1963년 10월 5일 각령 제1595호에 의한 직제 개정에 따라 초월, 실촌, 퇴촌, 동부에 지소를 두어 지소장과 지도원 1~2명을 배치하였고 1975년 1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읍면에 지소를 두고 지소마다 독립된 청사를 두고 농촌지도의 일선 역할을 담당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지도소(광주군)청사도 군청안에 신축하여 1979년 11월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第四節 都尺面 水利事項

1. 도척의 수리시설

第三篇 文 化

도척의 수리시설은 빈약하나 1970년대 이전까지도 주로 하천을 이용한 보(壩)를 설치하여 농용수를 확보하였으나 이는 구시대적 농사경영방법으로 낙후된 영농을 하였으나 1970년대이후 광주농지개량조합 소속으로 규모가 큰 저수지로 도척면 유정리 저수지가 1976년 준공을 보았으며 또한 추곡리, 진우리 2개소 소류지가 개설되어 도척면의 농업용수 확보를 하게 되었다.

2. 저수지 및 소류지

- 유정리 저수지
- 추곡리 소류지
- 진우 1리 소류지
- 진우 3리 소류지

① 유정리 저수지

이 저수지는 광주 농지개량조합 소속으로 서기 1976년 완공되었으며, 면내서 가장 규모가 큰 저수지이다.

이 저수지는 유정 1리와 추곡리 일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총저수량 : 789,000톤
목리면적 : 200정보
조합원수 : 274명 (世帶)
공사기간 : 36개월간
부대시설 : 보설치12개소
양수시설 2개소

임 원

이 사	강 석 조	유 정 리
대 의 원	김 정 일	노 곡 리
"	최 영 식	노 곡 리
"	구 민 회	유 정 리
"	서 승 옥	방 도 리
"	김 현 수	"
"	장 달 수	유 정 리
감 시 원	구 남 회	유 정 리



소재지 : 유정 수리조합 저수지

소속 : 광주농지개량조합

완공년월일 : 서기 1976년

저수량 : 789,000

목리면적 : 200정보

조합원수 : 274명

② 추곡리 소류지

소재지 : 도척면 추곡리 389-399번지

공사주 : 추곡리 주민

목리면적 : 60,000평

면적 : 3,500평

◎수리계

추곡리 소류지는 1967년 완공됨에 따라 里民 자체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소류지에 대한

第三篇 文 化

제반시설 및 관리를 위하여 계원 40명으로 조직하였으며 그후 소류지내 부지매입을 위하여 년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였으며 1990년도 시가로 25,000만원을 소류지내 부지매입비를 충당하였으며 소류지 간선 수로 시설 등을 수리계원의 노력동원으로 공사를 진척하였고 매년 발생되는 안전관리 공사등을 수리계에서 처리 시행하고 있다.

수리계 계장은 당해년도 추곡리 리장으로 수임케하고 있음.

- 소 재 지 : 도척면 추곡리
- 동 리 면 적 : 60,000평
- 면 적 : 6,500평
- 명 칭 : 추곡리 소류지
- 관 리 및 운 영 : 역대 리장
- 공 사 기 간 : 4년
- 준 공 년 월 일 : 1967년 10월

추곡리는 산간오지로 수리시설이 부족하여 오래전부터 농민의 숙원이었으나 경제적 곤궁으로 소류지 공사를 할 엄두도 없던 차, 제6관구사령부와 추곡리와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져 제6관구 사령부의 중장비를 지원받아 숙원이던 저수지 공사를 추곡리 389번지 지역에 저수지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나 추곡리 부락민의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장비지원을 받고도 수년(4)을 두고 형편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으로 공사지연은 불가피하였고, 종말에는 경기도 도비지원을 득하여 4년여에 걸쳐 소류지공사는 완공을 보았으나 부대시설인 수로공사는 연차적으로 부락민의 새마을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저수지 매몰지 토지대금은 매년 거두어 들인 수세명목의 조곡수입으로 수년의 단하여 정산하는 등 여러 어려운 조건을 극복한 지금에는 전에 전(田)으로 있던 것이 수리답으로 천수답이 수리안전답으로 변모되어 미곡생산의 증산 등으로 주민의 식량확보의 개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전 부락민의 일치단결된 활동이 지대하였으나 특히 공사초기부터 공사진행을 위하여 활약한 공로자가 있으니 고인이 된 혀홍(許洪)씨, 공사마무리 작업진행을 위하여 활약한 조복만(趙福萬)씨 등 양인은 영원히 추곡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지대하며 애향자로서의 솔선을 자발적으로 시범한 모범 지도자이다.

제6관구 사령부 정훈참모 송석환(宋錫煥) 소령은 추곡리와 제6관구사령부간의 자매결연을 위하여 또한 공사장비와 노력동원을 위한 활약이 지대하다.



도척면 진우리 저수지

③ 진우 소류지

도척면 진우 3리 점말에 위치한 것으로 1978년 10월부터 공사를 기공한 후 약 3개년간 공사를 진행하여 1980년 완공된 저수지로 목리면적이 50여정보이며 조합원수 102명으로 담수면적이 3정보이며 소류지의 간선 수로가 비교적 완벽함으로 중간 누수가 적어서 저수량이 풍부하여 농용수 확보는 물론 담수량이 늘 만수가 되어 있어 “낚시터”로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주위의 산림의 숲이 울창하여 관광지로도 활용되며 또한 보이스카우트 국제연맹 야영장이 있어 청장년들의 수련장으로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가 저수지 옆으로 관통되어 있어 제반 교통이 원활하다.

第五節 사회복지및 보건

1. 70년도이후 사회상

가) 19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

1970년대 말부터 가중된 경제적 침체는 정치적 효율성을 정치적 정통성으로 인식하고 있던 朴正熙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타격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광범한 반정부 세력을 낳았고, 특히 노동운동에 있어서 팔복할만한 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방림방직(1977) YH(1979~1979) 등에서의 커다란 노동분쟁 특히 YH무역의 젊은 여성 노동운동자들이 농성장소를 신민당(新民黨)으로 택함으로써 노동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신민당 내의 리더십 교체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신민당 내의 정부와의 타협적 지도부가 김영삼에로의 리더십 교체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타협적 야당으로부터 비타협적 야당으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리더십 교체 요구는 1978년 12월 총선에서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에 비해 1.1% 높은 지지율을 나타냄으로써 당내외로부터의 압력이 가중된 결과였다.

새로운 야당 지도자가 된 김영삼 총재는 정부에 대하여 가치없는 비판을 하였고 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서투른 대응 방법으로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하였다. 이에 자극된 부산의 학생, 상인, 산업노동자 선동, 반란불화 등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 바, 그것이 부마항쟁(釜馬抗爭)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체제 내적으로 심화된 정치적 위기는 급기야 10·26 사태로 연결되었는데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과 대통령 경호실장 사이의 “파워” 게임에서 파멸한 것이다.

박대통령의 암살은 유신체제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켰고 정치적 억압이 약화된 조건하에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광범한 민주화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가운데 전두환을 비롯한 일단의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12·12 군사 구데타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박대통령 암살 이후 1980년 5월 17일 계엄령 확대조치에 의하여 정치적 활동이 중지되기까지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3김씨는 각각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경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또 학원가는 박정희 대통령 말기의 긴급조치로부터 풀려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였다. 학생들은 민주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1980년 4월부터는 대규모의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5월 14일과 15일에는 서울역을 비롯한 시내 중심가에 70,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시위군중이 집결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노동운동도 급증하였다. 노동운동은 경인지구, 부산, 마산, 창원, 광주 등 주요 공업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갔으며 5·17 계엄령 확대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몇 주일 동안에 8만여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파업 확산 경향은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국가의 권위적 통제가 급격히 약화되어 간 데 그 큰 이유가 있었다.

5월 17일 신군부(新軍部)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5·17조치를 취하자 광주시민들은 이에 저항하여 5·18 광주민중항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신군부는 군을 동원하여 이를 유혈진압하였다. 이후 민주화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두환대통령의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은 이미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의 진압 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매우 강경한 것이었다. 정부의 강경진압에 대한 학생들의 도전도 매우 격렬하여 시위과정에서 구속된 구속자 수에 있어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1980년 5월부터 1983년 12월 학원 자율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반정부 시위로 구속 투옥된 수보다 훨씬 많은 1,400여명에 이르렀다. 이 기간 동안 이러한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자·농민등을 포함한 재야운동권은 전면적인 개편을 거쳐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과 재야운동권의 반정부운동은 큰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 시기의 정치가 탈 정치화되었다는 것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학원만이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과 요구를 집약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던 것이다. 학생운동의 과격화는 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의 탄압정책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게 되어 1983년 12월 학원자율화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학원에 대한 유화조치는 곧 정계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1980년 군부가 집권하면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정치인들에 대해 해금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겠으나 중요하게는 학생운동의 지속적 전개 미숙의 대한 정책에 대한 외부적 압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정치적 해빙은 정치공간의 재생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정치활동의 활성화는 민주화운동을 보다 강력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1983년 후반기 이후 서서히 시작되던 민주화운동은 1984년부터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983년 5월에 있었던 김영삼의 단식투쟁은 1984년 5월 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약칭 : 민추협) 결성에 큰 촉매제가 되었다. 민추협은 3차례 결친 정치해금자를 포함하여

第三篇 文 化

해직교수, 교직원, 기자, 작가들로 구성된 많은 단체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활발한 움직임과 더불어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민중예술, 문화운동가, 작가,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운동단체들이 급격히 확산되어 나갔다. 또한 1983년에는 과거의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약칭 : 민청련)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투쟁성을 강조하면서 급진적 반정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노동운동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4년 3월, 4년여의 잠행기에서 탈피, 한국노동복지협의회 결성을 시작으로 수많은 노동운동단체들이 나타났다. 서울지역 노동자연맹(약칭 : 서노련), 인천지역 노동자연맹(약칭 : 남노련) 등과 같은 단체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에 학생운동가였거나 학생출신 노동운동가들로서 노동운동의 급진성과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동인(動因)이 되었다. 이들 노동운동가들은 과거의 노동운동이 지향하였던 임금인상이나 노동자 복지 등과 같은 단기적 경제이익 추구에서 벗어나 노동악법폐지, 국민복지, 정권타도와 같은 보다 정치적인 문제들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변화와 함께 1980년대 문화운동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화운동은 과거 국가가 국민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독점, 통제하던 중요 수단인 교육제도와 대중매체에서 반문화의 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갔다. 그중에서도 출판문화운동은 다양한 운동권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반공보수적인 문화 풍토에 급진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반정부 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적 단계로 이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1983~1984년의 사회전반적 변화는 1985년 2월 총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증산층의 반란이라고 까지 표현된 2·12총선거는 민주화운동과 정국 전반에 심충적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1984년 11월 30일 3차 해금에 의하여 정치 규제에서 풀려난 구 신민당계 전직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김대중, 김영삼 등의 지원을 받아 1985년 1월 18일 창당된 신한민주당(약칭 : 신민당)은 2·12총선에서 기존의 제도권 야당인 민주한국당(약칭 : 민한당)을 거의 외해 상태로 만들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압승하였다. 신생 신민당의 급작스런 대두는 전두환 정권으로 하여금 정국을 유화국면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였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약칭 : 민정당)은 전면적 개각과 함께 민정당의 당직교체를 단행한 뒤 유화정책과 부분적인 강경정책으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 청년, 노동자, 교회단체등 대중적 참여에 의한 민주화운동은 이제 더 이상 부분적인 탄압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되어 갔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비타협적 재야운동권 세력에 대한 탄압의 첫신호로 민청련의 장단을 구속하였다. 민주화 운동은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운동권 자체내부의 변화인데 이는 주로 전국적 학생 조직인 전국학생총연맹(약칭 : 전학련)과 그 전위조직인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약칭 : 삼민투)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학생들은 1984년 11월 민정당사 점거농성과 1985년 5월 서울 미문화원 점거로 그 투쟁력을 과시하였다. 그 뒤 1986년도에 접어들면서 학생운동조직은 자민투와 민민투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구로공단과 같은 중요 공업 지역에서 10개 노동조합이 연대 파업을 하였고, 그 결과 40여명의 노조지도자들과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구속되었다.

또한 노동자와 학생들의 공개적인 분신자살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극단적인 투쟁형태는 이데올로기의 급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특히 학생운동권이 자민투와 민민투 두개의 조직으로 발전하며 반미운동으로 진전되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을 지니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반미감정의 확산에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 진압과 관련한 미국의 관련문제, 그리고 미국의 경제개방 압력과 국내적으로 악화되어 가던 전두환 대통령의 정치적 부도덕성 그리고 전두환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지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어우러져 있었다.

다음으로 광범한 시민의 참여운동으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도 활동적이었던 학생, 노동자, 진보적 교회단체들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85년엔 정치적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개헌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개헌의사표명과 이의 번복 등으로 정부의 신뢰도가 급격히 낮아져 갔다. 이렇게 되자 대학교수, 승려, 여성단체와 같은 광범위한 각종 사회, 종교단체들도 민주화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들이 국영방송인 KBS에 대하여 대대적인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민주화운동과 때를 같이하여 전개되고 있던 개헌 문제는 새로운 양태로 전개되었다. 즉 1987년초 박종철군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조치는 정국을 소용돌이치게 하였다. 정부의 도덕적 타락이 백일하에 노정됨으로써 정부도 부득이 호헌의지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1987년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어 6·10대회 6·26 평화대행진 등에 굽복하여 결국 6·29 선언을 통한 개헌의사를 분명히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국회를 통한 개헌이 성취되어 1988년 2월 새로운 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1987년 여름부터 전개된 민주화운동은 7~8월에는 노동계를 비롯하여 사회전체로 확산 전개되었다.

1,000만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주적 노동조합의 결성을 통한 정치참여가 두드러졌으며 각종 노동파업도 놀라울 만큼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회

第三篇 文 化

전반적 변화와 함께 1987년 12월 16일 합의개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민주화운동의 결과 야권의 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이라는 야권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그 지지표가 분산됨으로써 여권에서 야권에로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뒤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감정의 심화는 이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목되는 점은 야 3당의 총 의석수가 여권의 그것을 앞섬으로써 정국은 이제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1988년 5월 이후 통일문제가 국민의 주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는 학생(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들의 6·10, 8·15 남북 청년학생회담 제기에서 축발된 것이다. 한편 노태우대통령은 남북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내용의 7·7선언을 하였다. 이는 정부의 북방정책과 학생들의 요구가 맞물린 결과였다.

1989년에 들어 학생들의 평양 축전 참가문제가 주요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정부역시 이를 한때 공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결국 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생들은 외국어 대학교 용인캠퍼스에 재학중인 임수경(불어과 4년)을 대표로 북한에 파견, 평양축전에 참가시켰다. 임수경의 북한 방문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학생들에 의해 통일의 꽃이라 불린 임수경은 분단의 벽을 허물겠다며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고 그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第六節 사회복지

1. 도척면 보건행정 현황

정부수립이후 1949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독립된 보건부직제의 공포와 더불어 의정 약무 및 방역등의 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동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고 많은 전재민과 피난민의 구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55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개편하고 그동안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보건직제면에서는 물론 실제 국민 보건면에서도 해방후 현재까지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5·16이후 보건소법의 제정 공포로 종래 군에서 전담하던 보건의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는 동시 지방의료망이 강화되어 전염병의 방역퇴치순회 진료사업의 확충, 공중위생시설의 철저화, 기타 의료기관의 배

치, 보건의료시설의 확장 및 정지작업, 농촌의 안전급수사업 등 국민보건향상에 많은 공헌을 남겼다. 그 중에도 가장 괄목할 업적은 인구증가를 조절하기 위한 가족계획사업이라 할 것이다. 지난 날의 보건의료사업이 국민의 보건문제에 중점을 두었던데 비하여 오늘날의 보건의료사업은 한 걸음 나아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1979년 현재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보건의료망의 확장을 위하여 우선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사업과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빈약한 병상의 확충과 무의총일소책의 일환으로 대통령령 제6075호, 동 6913호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에 의하여 무의면에 수련의를 파견하게 되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무의면민에게까지 의료의 확대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우기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획기적인 발전과 더불어 저소득층에게 의료사회가 돌아갈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료보호법(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 호)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보건이 재래의 단순한 질병의 치료의 영역을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였으니 바로 보건소이다.

1962년 9월 21일 법률 제1160호로 제정 공포된 보건소법에 따라 각 시·군에 보건소가 설치되었고, 보건소는 군사업소로 의사인 소장과 약사, 간호원, 그리고 행정직과 보건직이 배치되어 시·군내 보건행정을 다루고 있고, 읍·면에 보건지소를 두고 있으니 보건소법에 정해진 보건소의 업무직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건소의 업무는 ① 보건사상의 계발 ② 보건통계 ③ 영양의 개선과 식품위생 ④ 환경위생과 산업보건 ⑤ 학교보건과 구강위생 ⑥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 ⑦ 보건에 관한 시험과 검사 ⑧ 결핵, 성병, 나병등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진료 ⑨ 특수지방병의 연구 ⑩ 공의지도 ⑪ 의약에 대한 지도 ⑫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⑬ 기타 국민보건향상과 증진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보건소는 의료보호의 일차 요양기관으로서 군민보건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수가」도 일반병원보다 저렴하므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시·군 보건소는 그 인력이나 장비로 보아 많은 인원을 진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치료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의료보호법을 마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 그리고 산업체 근로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의료보호법

第三篇 文 化

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② 사회복지 시설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자, ③ 재활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이재자, ④ 특별보호법 및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대상자와 그 가족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에 의한 월남용사와 그 가족으로서 보사부장관이 인정한 자, ⑤ 기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등이며 보호내용은 ○ 진료, ○ 치치수술 기타의 치료, ○ 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급부, ○ 의료시설에의 수용, ○ 간호, ○ 이송 기타 의료 목적달성을 위한 조치로 구분되며 보호방법은 지정의료보호시설에서 위의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의료시설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산업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호법이 있어 명실상부한 복지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사업의 가장 빛나는 성과는 가족계획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가족계획사업은 생활향상 그리고 인구조절을 목적으로 비롯되었다.

1960년 2.8%라는 높은 인구증가율이 1978년에는 1.6%로 떨어지게 되었다. 인구억제는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과 국가나 가정을 위하여 꼭 실시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자녀가 많은 가정에 영구불임수술을 하도록 지도하였고, 보건소에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하여 가정주부들에 대한 가족계획상담, 지도계몽 및 약품 알선에 진력하였으며 보건소는 가임여성에 대한 피임기구 및 약제를 무상배부하였으며 마을마다 부녀회를 주축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전개하여 인체해부·생리·배란수정등의 강연, 피임제·기구의 배정 및 사용법을 전수시키고 있다. 따라서 도착면에는 삼개소의 보건시소가 있다.

2. 보건소 현황

○ 도착 보건지소

- 소 장 : 김 태 우 (TEL 62-5011)
- 위 치 : 도착면 노곡리 68-15번지
- 개설일시 : 1982년 11월 1일
- 근무자(증·사원) : 소장 1명, 간호사 2명, 치과의사 1명

- 년간진료인원 : 내과 3,000명, 치과 850명, 계 3,850명
- 기타 특이사항 : 1) 보건소장및 (내과의사) 치과의사가 3년간 군병역의무기간을 근무하는 사항임.
2) 보건소 진입로가 비포장이라 우기철에는 환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

○ 상림리 보건진료소

- 소장 : 김미경 (TEL 48-4993)
- 위치 : 도척면 상림 2리 99-3번지
- 개설일시 : 1982년 10월 26일
- 근무자(종사원) : 의사(소장) 1명,
- 년간진료인원 : 3,300여명

○ 유정리 보건진료소

- 소장 : 이창옥 (TEL 62-5405)
- 위치 : 도척면 유정 2리 529-8번지
- 개설일시 : 1983년 3월 12일
- 근무자(종사원) : 의사(소장) 1명,
- 년간진료인원 : 2,500여명
- 기타 특이사항 : 1) 진입로 비포장인 관계로 우기철에는 환자통행 불편.
2) 공장건물이 병원을 막아서 위치파악 곤란.



유정 보건진료소

第三篇 文 化

- 관할 구역 : 추곡리 방도 1, 2리, 유정 1, 2리
- 건립 : 1984년
- 대지 : 30평
- 건평 : 20평 (유정리 529번지 소재)
- 직원 : 1명
- 운영위원장 : 姜錫祚
- 운영위원 : 조표의, 허유, 박현주, 김덕기, 한영수, 유영효, 김학기, 장달순, 김호태, 이영선, 이용기, 최도민, 김용기

3. 농촌의 醫療保險

올해부터 전국 134개 군에서 실시된 농어촌의 의료보험이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의 준비미흡과 보험료 등의 차등부과에 따른 문제로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촌의 의료보험의 실시와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율은 79.8%에 달하는 등 본격적인 국민 보험제도의 시작이 예고되고 있으나 운영에 있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료 부과가 현실에 동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불평 등 농어촌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 실시로 군민의 79.8%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로 복지국가의 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될 당시부터 「이 제도가 정작 필요한 계층은 농어촌 주민들」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결실을 본셈이고 당사자들인 농어민들도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제도가 지난 여러 장점과는 별도로 농어촌 의보의 운영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농어촌 疾療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 고정소득이 없는 농어촌에서 월평균 7~8천원의 보험료가 과연 적은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재료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조합주의라는 운영방식이 과연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의료보험 실시의 가장 큰 난점은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점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고를 이용하여 보건소와 지소의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고 전문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시설의 지역간 불균형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읍단위 이상의 주민들은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반면 리단위의 주민들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보건소나 근처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진료체계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점이 있다. 군조합에서는 郡내의 의·병원을 1차 진료기관으로, 道내의 모든 병원과 생활권내에 있는 타 시·도 병원을 2차 진료기관으로, 전국 대학병원급 이상을 3차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차 진료기관에 갈 경우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조합측은 주민들이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작은 질병으로도 2차 기관을 찾을 우려가 많고, 이에 따라 큰 병원에서는 의료수요 과잉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반면 군내의 병원은 경영상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료등급의 책정기준과 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농어촌 의보의 보험료부과는 15등급으로 나누어져 최저 3천원~3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다. 등급의 기준은 재산상태와 세대별, 가족 수에 따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농어민들은 보험료 책정이 재산세 규모, 세무서 소득기준, 유형의 재산상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되지 못한데다 무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던 점, 국고보조금도 4인 가족의 경우 1천7백50원으로 공무원이나 사업장 의보가입자에 대한 보조보다 규모가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 소득계층에 따른 기준의 세분화와 국고보조금의 증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조합과 주민들의 의견은 자칫 조합개정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의료수진율이 도시의 절반(3.2대 1.6)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근로자와 거의 같은 수준의 보험료(월 7천~8천원)을 낸다는 것은 농어촌주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 납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시범지역에서 나타난 문제로 지난 85년 조사에 의하면 재정적자가 2천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농어촌의보의 운영방식으로 채택된 조합주의 방식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동책임을 이루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의 면에서는 오히려 통합주의 방식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즉 조합주의는 작은 규모의 집단내부에서만 서로를 돋는데 그칠 뿐 위협이 보다

第三篇 文 化

폭넓은 분산이라는 보험원리나 전국민이 한 솔에서 서로 돋는 미덕을 충분히 실현하는데는 미흡할 뿐 아니라 소득의 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주의 역시 관료화, 비효율성의 문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재정에 적자가 나는 경우, 주민들의 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대비, 조합주의에 통합주의 방식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어촌 의료보험 시행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인접 市의 시민이 주민등록증만을 군으로 이전 군의보조합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시민의 광주군내 전입 또는 서울이나 대도시 근접한 군인 경우 그리고 같은 군에서도 도시형 읍면인 경우가 더욱 두드러진다.

농어촌 의료보험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수정하고 협조를 구할 조합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33명의 의보조합직원이 있지만 군주민 전체를 상대로 일하기엔 인력이 너무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 인원으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의료보험 홍보활동을 해야 하고 11개 읍·면 지소에서 상담과 보험료 재조정 업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 거주자 등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4. 都 尺 面 內 老 人 亭 實 態

일련 번호	노인정명	노인정설립		양로시설		주민 교育장	노인공동 작업방	칼라 TV	VTR
		단독	공동용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46	도척면분회	15평	8평	5평				1대	1대
47	유정1리노인정		10	10				1	1
48	유정2리노인정		29	6				1	
49	방도1리노인정	18		10	8			1	1
50	추곡리노인정		17	6				1	
51	상림2리노인정		5	5				1	
52	상림3리노인정		20	8				1	
53	진우1리노인정		22	10				1	
54	진우2리노인정		33	8				1	
55	궁평리노인정		15	10				1	
56	도옹1리노인정		20	10				1	

第二章 教 育

第一節 조선시대의 교육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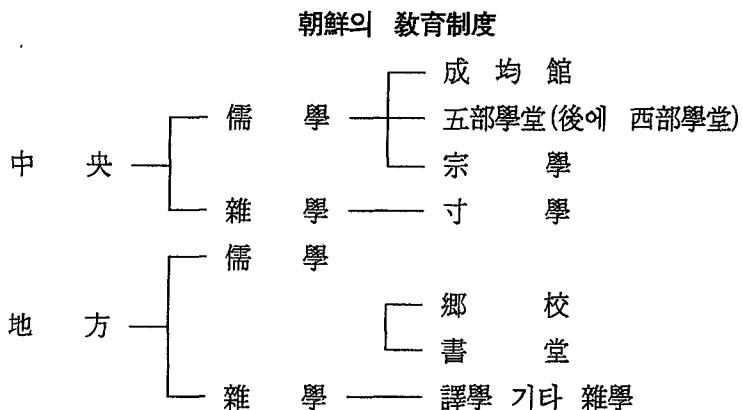
조선조의 교육제도의 근간은 성균관, 서부학당, 향교 등의 관학과 서원, 서당 등의 사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성균관의 명칭은 국학, 태학, 국자감, 양관, 현개등으로 시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으나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국학이라고 칭하였다가 신라 경덕왕 6년에 태학감이라 하였고 고려에서 처음으로 국자감이라 하다가 성균관으로 고쳐불렸으며 이를 다시 성균관으로 칭하여 조선조에 이르게 되었다.

서부학당은 태종 11년에 세운 남부학당이 시초이며 곧이어 중부, 서부, 동부 등의 설치가 이루어져 이를 서부학당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또는 서학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향교는 고려때부터 보급되었던 것으로 태조가 즉위하면서 개선 강화하였다. 그는 각 도 감사에게 명하여 향교의 興發로 수령의 치적을 考查하게 하였고 이를 계기로 향교는 남으로는 제주로부터 북으로는 甲山에 이르기까지 학생을 모아 경서를 가르쳐 부·주·군·현에 향교가 응성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조선조의 교육제도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第三篇 文 化

1. 성균관의 교육체제

〈學舍의 構造〉

가. (大聖) 文 廟

大聖殿과 東西兩庶로 되어 있으며 大聖殿에는 孔子와 諸賢을 모시고 있다.

나. 明 倫 堂

文廟의 뒤에 있으며 북측 중앙에 本堂이 자리잡고 좌우로 東齊가 있어 이곳에 유학생이 거처하였다. 本堂에서는 유학생이 學講하는 곳이다.

다. 專 經 閣

明倫堂 북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孔叔梁紇(孔子의 父), 顏無(顏面의 父), 會點(會●의 父), 孔鯉(孔伋의 父), 孟激(孟軻의 父)를 亭祠하는 곳이다.

라. 正 閣 堂

明倫堂 서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佛教를 금하는 방침으로 세운 것이다.

바. 文 一 閣

明倫堂에서 떨어진 북쪽에 세워져 있으며 大射禮를 행할때 쓰는 건물이니 射가 文藝의 一이라 하여 文一閣이라 한 것이다.

이밖에도 一兩齊와 關入齊, 正錄廳, 書吏廳, 京仁廳, 典禮廳, 守僕廳, 香廳, 樂生廳, 祭器廳, 遮帳庫, 直房, 食堂, 西壁庫, 門庫, 東西月廊등의 건물이 부속되어 있다.

太祖 7년의 成均館 職制

知 事	同知事	大司成	祭 酒	司 藝	直 講	典 籍	博 士	學 正	學 錄	學 諭
正二品 1	從二品 2	正二品 1	正三品 2	正四品 3	正五品 4	正六品 13	正七品 3	正八品 3	正九品 3	從九品 3

〈入學資格〉

성균관의 입학자격은 經國大典에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탄력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經國大典을 바탕으로 한 입학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生員과 進士 둘째, 生員과 進士가 부족할 때 연령 15세 이상의 西部學堂 학생으로 小學과 四書—經에 통하는 者나 일찌기 文科나 生員, 進士 또는 鄉·漢城試에 합격한者, 朝士로서 학문을 닦기를 원하는 者, 薩嫡子로서 小學에 통하는 者, 京鄉 幼學 優秀者 이밖에도 종친의 입학이 허용되고 있어 세종 12년 진평대군 族과 안평대군 子가 성균관에 입학한 이후로 많은 종친들이 성균관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2. 교육의 사적 고찰

교육의 일반적 정의를 조사해 본다면 「성숙한 사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심신의 모든 성능을 발육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미치는 영향. 즉, 피교육자의 지식·이해·태도를 기르고 생활을 발전시키며 인격을 형성하는 인간의 육성 과정이며 그 작용의 주체로 보아서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국가정책의 직접적이고도 주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왕조(王朝)에 의한 단락으로 구분하여 연구 고찰함이 좋을 듯하다.

고대(古代)의 교육에 대해서는 옛기록이 없어 막연하나 고대사회가 1종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발전하였고 또한 가족제도(씨족에서 부족)가 성립되었던 고로 도덕과 예의(禮義)를 중시하며 미풍양속을 길렀고 생활을 위한 생활교육이나 종교의식의 교육 외적(外敵)과 맹수를 물리치기 위한 군사교육, 일반생활을 위한 기초적 생활교육등이 형성되었을 것이므로 고대의 교육이 어떠한 교육체계 아래 제도화되지는 못했으나 교육의 공통된 형태는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한문화(韓文化)에서 일반화된 문교(文教) 교육의 성립은 한자(漢字) 한문의 전래 보급의 과정에서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자와는 별종인 한민족(韓民族) 고유의 문자가 훈민정음(訓民正音) 이전 상고시대부터 사용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전혀 역사적 논증을 얻을 수 없는 추론(推論)일 뿐이기에 한자의 전래를 알아보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본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국 최고의 한자 금석물(金石物)인 평안남도 용강의 첨단현 신사비(神祠碑)가 기원후 85년에 건립된 것이 사실이라면 한자는 그 이전에 전래되었을 것이고, 이는 문자 사용에의 욕구와 그 보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진한 중국문화 수용에의

第三篇 文 化

욕망 등으로 한자 습득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을 것이지만 다만 이를 평등화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뿐이다.

3. 조선시대의 교육

조선조는 고려보다 더욱 적서(嫡庶), 반상(班常), 양천(良賤)의 신분적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사대부의 자제에게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도 관리양성이나 과거(科舉)를 통한 관리등용을 위한 것이었고 형태나 내용은 도덕을 중시하는 유학(儒學) 교육을 근본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대부의 자제는 전국 각지에 사설(私設)되어 있는 서당에서 한문의 초보를 익히고 다음으로 중앙의 사부학당(士夫學堂) 또는 지방의 향교에 진학하여 5~6년동안 만학하고 생진과(生進科), 소과(小科)에 응시하였으며 합격자는 생원·진사가 되어 성균관 유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얻었다.

성균관 유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는 문과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고 문과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간혹 음직(陰職)이라 하여 5品 이상 관리 자제는 과거에 관계없이 벼슬 길에 오를 수도 있으나 그 수는 적었다. 그러나 생원·진사는 반드시 서학이나 향교를 거친 자는 아니었고, 문과 응시자도 또한 성균관 유생에 한한 것은 아니었다.

성균관은 조선후기까지도 그 권위를 유지해 왔으나 향교는 중기 이후 무력해져서 지방 교육기관으로 대체되어 갔다. 이 서원(書院)은 선현을 봉사(奉祠)하는 사와 자제를 교육시키는 제(齋)가 종합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을 경영상으로 보면 성균관과 서학은 중앙정부에 직속되고 향교는 각 주·현이 관할하는 관학으로서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을 이루고 있으며 서원과 서당은 사학기관이었다.

교육의 최고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정부(議政府) 산하에 예조가 있어 유지, 운영하고 장려·감독하였다. 각급 교육기관은 과거시험의 준비기관이고 관리의 양성기관으로 교수 방법은 주로 개별적 지도방법을 사용하여 지금의 교사에 해당하는 강을 매일 부과함으로써 그 성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각 학생의 진도를 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교육은 그 형성과 내용이 다같이 중국의 유학적 교육으로 개인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되고자 인격을 향상시키는 공을 세웠으나 한편으로는 개인주의 학계(學系) 및 족계(族系) 중심주의 중국 중심의 사대사상 및 보수적 사고방식 또는 성리학의 폐단인 형식주의 승문주의의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

4.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기본적으로 고려의 그것을 이어받아 더 치밀하게 체계화 시킨 것이다.

태종 17년(1417)의 과거법을 비롯하여 세종때에는 여러 과거정식이 마련되었고, 국초부터 무과(武科)도 실시되었다.

소과(小科), 문과(文科), 무과(武科), 잡과(雜科)의 네가지 종목으로 구성된 과거 시험에는 매 3년 즉, 子·卯·午·酉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식년시(式年試)와 이밖에 수시로 열린 증광시(增廣試), 별시(別試), 정시(庭試), 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이 있었다.

응시 자격은 소과, 문과, 무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인을 제외시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양인이 응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즉, 사족(士族)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족이라 하더라도 서용(敍用)되지 못할 죄를 범한 자와 장리(職吏)의 아들 재가(再嫁) 또는 실행(失行)한 부녀자의 자손, 서얼(庶孽)의 자손에게는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잡과의 응시자격은 훨씬 넓어 양반에서 탈락된 무리나 교생(校生), 향리, 지방 양가 자제들도 응시할 수 있었다.

이제 식년시를 중심으로 각 과거 종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과(小科)

소과에는 경학(經學)을 고시하는 생원시와 시·부 등의 문학을 고시하는 진사시가 있어 생원·진사시라고도 하고 또는 감시(監試)·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하였다. 처음에는 사장(司掌)만을 중시하던 고려의 유풍(遺風)을 버리고 유교 본래의 경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원시만 두었으나 단종 원년(1453)부터는 진사시도 설치하였다. 생원·진사시는 초시와 복시 두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들에게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소과에 응시하는 유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유학이라 하였다. 이들 유학에 대한 초시는 상(上式年) 즉, 亥寅巳申년 가을에 서울은 한성시에서, 외방팔도는 향시에서 시행되어 정원의 2배를 선발하였고 이들을 다시 식년 봄에 서울에 모여 복시를 부과하였다. 생원시의 시험과목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사서의(四書疑) 1편 五經義 1편으로 되어 있었으나 대전통편(大典通編) 단계에서는 춘추를 빼 사서의 1편과 시경의 1편으로 되었다. 진사시의 시험과목은 부 1편과 고시(古詩), 명(銘), 함 가운데 1편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소과에는 한성시·향시 외에도 초시에 해당되는 승보시(陞補試), 합제(合製), 공도회(公都會) 등이 있어 여기에 합격하면 곧바로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소과의 복시는 생원·진사시를 막론하고 1등 5인, 2등 25인, 3등 70인으로 통제를 정하였다. 특히 장원급제의 경우는 담안의 우월 보다 평문의 자체를 뽑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 합격자에게는 왕이 백페(합격증서)와 주과(酒果)를 하사하였고, 이들도 문과 급제자와 마찬가지로 유가(遊街)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식년시 또는 증과시로서 소과가 모두 236회 시행되었다.

여기에 합격한 생원·진사들은 곧바로 관직을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성균관에 입학하여 다시 문과를 준비하는 것이 통례였다.

◎ 문과(文科)

문과는 대과 또는 동당시(東堂試)라고도 하였는데 초시·복시·전시(殿試) 등 세 차례의 시험을 통하여 33인을 선발하였다. 이 문과의 응시자격은 생원·진사뿐 아니라 유학(幼學)에게도 부여되었기 때문에 소과가 문과를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은 아니었다. 문과 초시는 고시장소에 따라 관시(館試), 한성시(漢城試), 향시(鄉試)로 구분되어 상식년(上式年)의 9월에 일제히 시행되었다. 초시에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이 있는 바 초장에서는 경학을, 중장에서는 시·부·표, 종장에서는 대책(對策)을 각각 시험하여 합계점수로 급락을 결정하였다. 복시는 초시합격자를 식년 봄에 서울에 모아 초시와 마찬가지로 3장제에 의하여 33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회시(會試)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복시에는 과락제도(科落制度)가 있었다. 즉, 시험평가를 통(通), 락(略), 조(租), 불(不)의 넷으로 구분하고 초장의 강경(講經)에서 사서삼경 모두에 조(租)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중·종장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시는 복시에서 선발한 33명을 전(殿)·정(庭)에서 시험을 부과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시에서는 탈락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시의 시험과목은 대·책·표·전·함·송·제·초중 1편이었으나 뒤에 논·부·명을 추가하여 10과목 중 1편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대·책이었다.

등급은 처음에 을과 3명, 병과 7명, 동진사 23명으로 나누었으나 몇 차례의 변동을 거쳐 세조 12년(1466) 이후부터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확정되었다.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는 흥페(紅牌)를 수여하고 관품을 주었지만 이들이 곧바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갑과 1등 즉 장원급제자는 종6품, 갑과 2등과 3등에게는 정7품을,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의 품계를 받았는데 이들 가운데 갑과 3명에게만 실직(實職)을 주었고 나머지는 四館, 성균관, 예문관, 승문관, 교서관에 후보자 또는 시보로서 나누어 배속시켰다가 자리가 생기면 실직을 주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급제자는 많고 관직은

적어서 후보자로만 10년이상 지내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한편, 이미 품계를 가진 자가 급제하게 되면 갑과 1등은 4품계를, 갑과 2등과 3등은 3품계를, 을은 2품계, 병과는 1품계를 승진시켜주었다.

◎ 무과(武科)

무과는 식년마다 문과와 함께 시행되었다. 식년 무과도 초시, 복시, 전시의 세 단계를 거쳐 28명을 선발하였다.

초시에는 시험보는 장소에 따라 원시(院試)와 향시가 있었는데 원시는 훈련원에서 주관하여 70명을 선발하였고, 향시는 각도의 병마절도사가 주관하여 경상도 30명, 충청·전라도 각 25명, 강원·황해·영남·평안 각 10명씩 모두 120명을 뽑았다. 시험과목은 무예(武藝)로 처음에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 등 6가지였으나 속대전(續大典) 이후에는 목전, 철전, 전편, 전기●, 柳葉箭, 조총, 鞭● 등으로 늘어났다.

복시는 식년봄에 초시 합격자를 서울에 모아 병조와 훈련원에서 주관하여 28명을 선발하였다. 시험과목은 초시와 동일하였으나 여기에 무과출신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무경의 강서가 포함되었다. 전시는 무과와 마찬가지로 복시에서 뽑은 28명의 등급을 구분하는 것으로서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으로 정하였다.

◎ 잡과(雜科)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서 역과(譯科), 한학(漢學), 몽학(蒙學), 왜학(倭學), 여진학(女眞學),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科學), 율과(律科)의 넷으로 구분되었다. 초시와 복시만으로 급락을 정하는 잡과는 식년시와 중평시에서만 시행되었는데 관계되는 각 사에서 주관하였다.

잡과에 합격하면 역과 1등의 경우 본 아문의 종7품을, 2등은 종8품을, 3등은 종9품을 받았고 다른 과의 1등은 종8품을,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을 각각 받았으며 이미 품계를 가진 자는 한 등급 가자(加資)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실직이 아닌 권지(후보자)로서 각 관청에 분속되었다. 소과, 문과, 무과가 실질적으로 양반을 위한 과거시험이었다면 이 잡과는 중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시험이었다. 잡과는 사족 신분에서 도태된 부류가 응시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하급신분층에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새대 신분 변동의 한 계기가 되었다.

◎ 성균관(成均館)

第三篇 文 化

「태종 7년(1407)에 재건하면서 체제를 확립하여 1894년 갑오 개혁에 이르기까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

성균관은 공자를 비롯한 오성(五聖) 10철(哲) 72제자 및 신라이후 10현(賢)을 모시고 제사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이후 38명의 직원이 운영과 교육을 담당하였다.

생원·진사가 미달될 때는 15세 이상의 사학생도 유음적자(有蔭嫡子), 대소과(大小科)의 초시 합격자 등으로 보충하였다. 그러나 정원부족을 이유로 영조 때는 정원을 120명, 조선말기는 100명으로 정한 때도 있었다. 교육내용은 대학(大學), 중용(中容), 논어(論語), 맹자(孟子), 시경(詩經), 서경(西經), 주역(朱易), 춘추(春秋), 예기(禮記)를 주로 한 개별적 지(指)·제술(制述)·작문(作文)을 병행시켰다. 물론 과거준비 교육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우선 되었지만 학령에 의거 바른 생활을 하도록 유학적 선비의 양성에 힘써 왔다.

◎ 사학(四學)

조선 국초부터 동서남북 중의 5부 학당이 있었으나 태종 11년(1411)에 이것을 강화하였고 그중 북부학당만은 세종때 폐지되어 4부학당이 되었다. 사학은 관립(官立)으로 각 학예교수(종6품) 2인을 두어 유생교육에 종사케 하고 토지·노비·어장을 하사하여 그 수입으로 양사(養士)의 비용에 충당케 하였다. 학생은 100명이 정원으로 독서 시경을 거친후 각종 과거에 응시케 하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사학(四學)은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된 후로 재건되었으나 점차 쇠퇴하여 유명무실하게 되고 대신 서원과 서당이 발전하면서 교육진흥을 맡게 되었다.

◎ 향교(鄉校)

향교는 지방에 세운 관립 교육기관으로서 고려 말부터 시작되다가 조선 개국 후 더욱 힘써 각읍에 1교씩 세웠다.

향교는 성균관과 같이 성현을 형사(享祀)하는 일과 지방의 유생을 모아 강학(講學)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으로 대성전(大成殿), 동서문묘(東西文廟), 명륜당(明倫堂), 동서양제(東西兩齋)가 있었으며 지방행정구역에 따라 교수 훈도를 두어 교육했으며 학생은 목(牧)에서 90명, 군은 50명, 현은 각 30명씩으로 도내에는 840명이 있었다.

第二節 일제 암흑기의 교육정책

1. 한일 합병과 식민지 교육정책

1910년 8월 29일은 민족의 수난일이며 국치일이다. 일제는 이날 한일합병조약을 발표하여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본격적인 식민지 통치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바꾸고 입법·사법·행정 및 군사의 통사권까지 장악하는 한편 악명 높은 현병과 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철저한 탄압을 시작했다.

한국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등의 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집회의 자유도 박탈당했다. 한편, 민족적 주장을 폐는 신문을 폐간하여 언론을 봉쇄하기에 이르렀으며 한국문화의 초토화를 도모한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한결같이 그 최종목표를 조선인의 황국 신민화 정책에 두어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한민족에 대한 말살정책이었으며 이에 대한 민족정신의 각성이 고조되어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민족적 각성에 대응하여 몇 차례의 통치방식에 대한 불가피한 수정을 가져오게 된다.

제1단계는 일제강점이 있던 1910년부터 3·1 민족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까지의 초기 10여년 동안의 일본 식민지 정치로서 무단정치로 표현된다. 일본제국주의는 서울에 총독부를 두고 육해공군의 대장으로 하여금 이를 맡게 하였으며 그들은 현병과 경찰을 통합하여 중앙의 경무총장에 현병사령관, 각도의 경무부장에 현병대장을 임명하여 조선인의 민족적 활동을 철저히 탄압하고 정치적 결사 집회는 물론 단순한 집합까지도 금지하였으며 한글로 된 신문의 발간마저 금지하였다. 관리나 교원까지도 제복을 입히고 허리에 칼을 차게 할 정도로 오로지 위압에 의하여 한국인을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다.

제2단계는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거쳐 일본의 침략적 야심이 대륙으로 확대되던 1931년까지 10여년간으로 이 시기는 형식적 문화정치 시기로 표현된다. 일제 강점 후 한민족의 민족정신 말살을 위한 일본의 폭력정치는 1919년 3·1 운동에 의하여 조선인의 강력한 민족적 항쟁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인 소위문치·문화정책이란 이름 아래 육해공군의 대장에서 임명하던 조선총독을 정치인으로 임명하였으며 현병경찰 대신에 보통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관리와 교원이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하였다.

이와 아울러 미소 정책의 하나로 일본인에게만 주었던 보통학교장직에 조선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언론에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어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일보 등 국문 신문의 간행도 허락하였다. 또 중앙과 지방의 정치에 있어 극히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한국인의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게 길을 열었다.

第三篇 文 化

그러나 이와같은 일련의 정책은 격앙된 조선인의 민족감정과 거족적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일제의 형식적 미소정책에 불과하였음을 두밀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고등경찰 제도를 확립하여 조선인의 민족적 독립운동을 탄압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3단계는 일제의 침략적 야심이 전세계로 확대되는 시기로서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그곳에 그들이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세우고 1937년 중국과 충돌을 일으켜 중일전쟁의 서막을 열었으며 세계2차대전이 일어나자 독일·이태리와 동맹을 맺고 1941년 12월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여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을 대륙침공의 병참기지로 삼아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시켰으며, 3·1운동 후의 형식적인 문화정치를 타파하여 철저하게 조선인 민족정신을 탄압하고 내선일체 동조 동근의 궤변적인 이론을 내세워 식민정책의 최종적 목표인 황국신민화를 실현하려고 획책했다.

일제는 1938년 교육령을 개정하여 일본식으로 학교명을 고치고 황국신민의 서사라는 것을 만들어 자라나는 학생과 일반 민중들로 하여금 외우게 했으며, 일본어의 보급을 위하여 우리말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우리말로 발행되던 신문을 폐간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신을 조선민족에게 주입하기 위하여 황국신민화 체조를 제정하여 학교는 물론 관공서와 청년단에 보급시키고 애국일을 정하여 신사참배와 일황족기 계양을 강제로 시켰으며 선인의 전통과 조선인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되고 오로지 일제에 절대 복종만이 강요되었다.

이와 같이 일제는 정치적으로는 무단정치를 펼쳤고 경제적으로는 수조(水尊)정책을 펼고 교육적으로는 우민화정책과 저질정책을 썼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좀더 깊이 천착하면 첫째, 한국국민의 민족의식을 황국신민을 만들려는 황국신민화 교육이었으며, 둘째,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을 만들려는 우민화 교육이었고, 셋째, 식민지의 경제적 수탈과 노동착취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실무교육에 치중하는 일이었다.

일제초기의 식민지 교육의 기본정책은 1911년에 공포한 조선 교육령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현격하게 열등한 학교 제도 밑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내용을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일어를 강요하고, 일본의 문물을 주입하며 일본인교사를 채용해 쓰고 교과서를 통제하였으며 한국인 교사와 학생들의 사상을 감시하는 등 식민교육의 노력을 충양(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데 경주하였다.

학교제도에 있어서는 민도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구실 아래 일본인 교육을 위한 학교 제도와는 차별을 두어 보통학교 3·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전문

학교 3~4년의 열등한 수업년한을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설립을 극도로 억제하였다.

2. 일제 말기의 교육정책

한국을 식민지로 확보한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대륙 침략을 혁책하여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으며 이 두 전쟁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정치·사회·경제교육 등에서 초비상사태를 맞게 되었다. 전쟁 수행을 위한 비상대책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이 시기의 교육을 철저한 일본화교육의 전시체제화에 있었으므로 모든 교육활동을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민족을 황국신민화하려는 그들의 계책을 더욱 간교하고 악랄해졌다.

3. 建國后 現在까지의 教育 概要

〈건국후 60년대까지의 교육〉

1948년 3월 15일 정부수립 후 민주주의體制로 國基를 다지며 신생독립국가로서 이승만대통령이 이끄는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으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기를 틈타 1961년 6월 25일 북한공산당의 남침으로 국가민족이 일대 위기에 직면하고,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은 실의에 빠졌으며 경제는 도탄에 빠지게 되자 정부는 국시를 반공으로 전환하고 초토화된 국토를 재건하는데 총력체제로 들어갔다. 학생들은 배고픔에 배를 움켜쥐고 잣더미 위에서 만학하는 모습은 눈물겨웠다.

그후 1960년 4월 19일의 4·19의거와 1961년 5월 16일 5·16혁명을 치르면서 제2공화국이 탄생했고 국토재건과 민생안정, 국민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교육의 갈길을 제시했으니 즉, 민족정기를 불어 넣기 국민정신교육과 아울러 과학교육, 실업교육, 항토학교, 건설 등의 교육으로 국가경제건설에 발맞추었다.

〈70년대 교육〉

50~60년대는 국가시련을 극복한 시대였다면 70~80년대는 경제, 건설의 시대였다. 70년대에 들어서도 정치, 사회적으로 국민의 불만은 가시지 않았다.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장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을 이끌고 국민은 미래 희망으로 적극 호응하였으며 교육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장학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第三篇 文 化

- ① 반공교육
- ② 새마을교육
- ③ 維新교육
- ④ 과학교육
- ⑤ 민족문화교육

위와 같은 장학방침을 제시하여 경제건설과 국토방위에 필요한 제2세 국민교육에 주력했다.

4. 80년대 교육

1979년 10월 26일 경제건설에 기틀을 잡고 강력한 정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했던 박정희대통령이 急逝去 함에 따라 또다시 정치 사회 등으로 혼란에 빠지고 국가존립이 위태로울 때 1981년 3월 3일 전두환대통령이 12대 대통령으로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정부시책으로,

- ① 국가안정
- ② 민생안정
- ③ 사회안정
- ④ 경제안정

등 4개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에서는,

- ① 국민정신교육
- ② 과학교육
- ③ 기초학력정착
- ④ 전인교육
- ⑤ 평생교육

을 장학시책으로 내걸고 각종여건에 불리한 중에서도 시책구현에 노력했다.

〈제6공화국시대의 교육〉

노대통령이 이끄는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다져진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그간의 정치적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 민주체제로 시책전환을 하면서 경제발전을 도약시켜 중진국에서 선진국 계열로 올려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정지표를,

- ① 민족자주
- ② 민주화합
- ③ 균형발전
- ④ 통일번영

등 4개항을 내걸고 안으로 국민화합, 밖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교육에서는 “미래를 주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내걸고,

- ① 민주시민육성
- ② 도덕성회복
- ③ 건전한 생활기풍진작
- ④ 기초교육의 충실
- ⑤ 고학교육의 내실

이런 교육을 통해 질서와 준법의 시민교육, 균검절약의 생활기풍, 기초학력과 과학교육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여건의 개선에 노력했다.

第三節 해방후의 教育

1. 건국초기의 교육

改正의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은 곧 대한민국의 수립과 이어지지를 않았다. 이는 민족의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경계로 우리나라를 분할점령하여 주둔함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 시기의 혼미한 정치상황은 북한집단의 적화야욕을 부채질했으며 미국은 1947년에서

第三篇 文 化

야 한국의 독립문제를 UN에 제출했다. UN은 한국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즉시 실현하게 한다는 제시아래 UN한국위원회를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그 감시아래 남북한의 인구비례에 따른 보통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본심이 달랐던 소련 점령하의 북한공산당은 이 결정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한국위원회의 북한에서의 활동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UN한국위원회의 활동은 남한지역에 한정되었으며 선거는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UN의 결정에 의해서 1948년 5월 10일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방식에 의한 총선거를 이남지역에서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7월 17일에 역사적인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정부수립과 함께 초대 문교부장관에 안호상이 취임하여 민주주의 민족교육을 강력히 주장하고 국민사상을 귀일시켜 반공정신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일민주의 사상을 폄나갔다.

〈학도호국단 설치와 일민주의〉

일민주의는 초대 문교부장관인 안호상의 주창에 의한 문교시책이었다.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바탕한 일민주의교육은 학원의 사상적 안정과 반공체제의 확립을 가져 왔으며 학도호국단의 설치로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일민주의라고 지칭된 말의 개념은 흥익인간의 이념에 입각하여 남북이 민족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염원을 일민주의라는 표현으로 불렀으며, 이는 당시의 혼란했던 공세를 타개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당시 일민주의 사상보급을 교육에서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었음은 이 때문이다. 일민주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문교부는 학생들의 단체훈련을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연마하여 학원 내에서 좌익계열의 쟁동을 분쇄하며 또 민족의식을 고창함으로써 애국적 단결심을 함양하겠다는 취지에서 1948년 12월에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8년 12월부터 학생간부 2,400명을 문교부에서 선정하여 중앙학도훈련소에 입소시켜 단기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학생훈련을 위하여 전국 중·고·대학의 체육교사 387명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시켜 단기훈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마친뒤 1949년 1월 23일 「학도호국단 조직요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1949년 2월에

학도호국단이 창설되었으며 이를 즈음하여 廣州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이었던 광주중학교에서 학도호국단이 창설되었다.

2. 지역사회 교육 추진

국가의 융성과 민족의 번영은 오로지 참된 교육으로만 이룩할 수 있는 것이며, 장래를 기약하는 건실한 교육은 보편 영원한 것의 희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현실에 두어야하고 그 항상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그 속에서 걸어온 교육의 발자취를 냉정히 더듬어 볼 때 양단된 국토는 6·25의 참상과 더불어 경제적 질식을 초래하여서 국민은 빈곤에서 허덕이고 결핍된 국민생활은 민주사상의 그릇된 인식과 더불어 신의도 책임도 저버린 혼탁 유폐된 사회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사회현상은 학교 교육활동에 이모저모 작용되어서 뜻한 바 사명을 지키려는 노력과 성과를 저해하니 역사적인 필연의 운명이라고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기에 겨레의 등불임을 자부하면서 사회에서 격리된 교육의 구태에서 용감하게 벗어나서 현실을 타개 개조하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개척적인 인간의 융성과 민족혼을 진작하고 도의 사회를 건설하는 교육으로의 지향을 목표로 하고 그 실현은 지역사회학교의 건설과 학원윤리 운동의 전개에 있다고 확신하여 학교교육을 새로운 기틀에 세우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동시에 그 실천에 전심할 것을 교육자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 1) 우리는 과거의 인문 지상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참된 개인의 생활능력을 부여하여 국가의 당면과제인 경제부흥에 이바지할 생산 과학기술인을 육성한다.
- 2) 우리는 교육의 원동력이 교육자의 불타는 정열과 꾸준한 실천에 있음을 다시 깨닫고 더욱 사도를 연마하고 협동 단결하여 본도 교육발전에 매진한다.
- 3) 우리는 학교의 문을 열어 사회에 개방함으로써 그 필요에 응하고 교육의 보람을 부각 지역사회 개조에서 일교 일부락을 담당지도하고 그 발전에 봉사한다.

第四節 유신시대의 교육

1. 유신기의 문교정책과 장학방침

第三篇 文 化

1971년 7월 1일 박정희가 제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때에 세계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갔고 북한의 움직임을 심상치 않다고 판단되던 때였다.

북한의 남침 야욕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공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2월 6일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었다.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분단의 장벽을 헐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커다란 사건이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일단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대 개혁과 유신의 필요성에 따라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유신의 대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거쳐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재선출하였다. 이로써 질곡의 한 시대인 유신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10월 유신으로 70년대 국정의 모든 부분이 유신을 위한 행정체제로 급전환하였고 교육도 유신과업을 수행을 위한 국가에 따라 유신교육을 위한 교육시책으로 대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은 획일적 중앙집권적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70년대 문교정책은 한 마디로 유신과업수행이었으며 교육을 통한 유신이념의 정착화였다.

이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구현, 국가안보교육, 새마을교육, 과학기술교육, 보건체육교육을 중심으로 「국적 있는 교육」이 제창되었으며, 1968년에 선포한 국민교육헌장이 국적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지표가 되었다.

당시의 문교 당국자는 장학의 기저가 되는 교육시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니 1974년 1월 29일 문교부 초도순시에서였다.

이 보고에서 문교부는 교육력 강화를 위한 문교시책의 바탕을 세계질서의 재편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개 안정과 번영에 대한 시련 유신과업수행을 위한 긴급조치 선호 등 상황 변동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에 두고 경제의 상위중진국 수준 도달, 참다운 복지사회의 건설, 주체적 민족문화의 증강,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전망으로 미래지향적 교육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① 교육을 통한 유신정신의 내실화, ② 새로운 학원질서의 확립, ③ 교육의 생산성과 실용성 제고, ④ 참된 스승상의 부각 등을 문교시책으로 펼쳐 유신교육입국을 실현코자 했다.

여기서 1970년의 문교장학 기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가는 기반으로서의 우리 한국교육의 목표는 「민족중흥과업을 영예롭게 성취할 수 있는 국민성」에 두어야겠다.

② 이러한 교육운동의 내용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총력안보교육과 인간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의 3대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길이다.

③ 성실한 국민, 슬기로운 민족 만들기 운동의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사회, 가정의 동일 목표를 향해서 협조하는 범국민체제를 이루어야 한다.

④ 교육의 관건은 교사에게 주어져 있다. 겨레의 스승, 국민의 향도로서의 교육자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명의식에 투철할 때 그리고 교육유신을 위한 정열에 불탈때 우리 국민성은 더욱더 밝아지고 민족의 체질은 활션 짚어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교 장학의 기저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과 교원이 유신체제 아래에서 도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들어가는 말에서 「우리는 유신의 길을 가고 있다. 유신이념의 생활화로 민족중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체제 등을 쇄신함으로써 스스로 정신혁명의 기수가 되고 지역사회발전의 두뇌가 되어 조국통일의 선봉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유신의 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교육이 유신정권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유신말기인 1979년에 제7대 교육장으로 취임한 한성완(1977. 3. 1~1980. 8. 31)은 79학년도의 장학 방침과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추진하였다. (管內學校(초·중·고)가 이에 따름)

2. 교육의 세부방침

가) 국민정신 교육 심화

- ① 국민정신교육구현
- ② 廣州의 열 계승
- ③ 건전가요 부르기 대회
- ④ 경로교실 설치 운영
- ⑤ 민속놀이 대회
- ⑥ 방공 응변대회 및 글짓기 대회
- ⑦ 반공교육 요원 전지 훈련
- ⑧ 반공교육자료 전시회
- ⑨ 방위성금 모금
- ⑩ 효행실천 사례 발굴
- ⑪ 효행장제 및 선학장제 실시

第三篇 文 化

- ⑫ 모범학생 표창
- ⑬ 교외 생활지도반 운영

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

- ① 장학계획서 발간
- ② 새수업 체제 운영
- ③ 군지정 연구학교 운영
- ④ 새수업 체제 평가협의회 운영
- ⑤ 장학자료 발간
- ⑥ 학력평가 실시
- ⑦ 학력정착 상금제 실시
- ⑧ 수업설기및 교육자료 전시회
- ⑨ 초·중학교 평가의 실시
- ⑩ 지구별 장학협의회 운영
- ⑪ 1인 1기 연구발표 대회
- ⑫ 예술제, 학술제, 음악회 개최

다) 새마을 교육의 생활화

- ① 새마을 교육 우수 사례 발굴
- ② 학교 환경의 교체화·공원화 추진
- ③ 자연보호운동의 적극 추진
- ④ 저축목표의 달성
- ⑤ 새마을 실천 사례 발굴

라)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

- ① 교재 교구의 확보
- ② 지역 자료실의 운영
- ③ 과학교육 시범학교 운영

마) 보건체육 교육의 총실

- ① 종합체육대회 개최
- ② 교재 군별 지도 철저

第五節 현재의 도척교육기관(1991)

1991년 현재 도척교육기관으로는 국민학교가 2개교, 중학교 1개교, 부설 유치원 2개소, 부락단위 유치원 3개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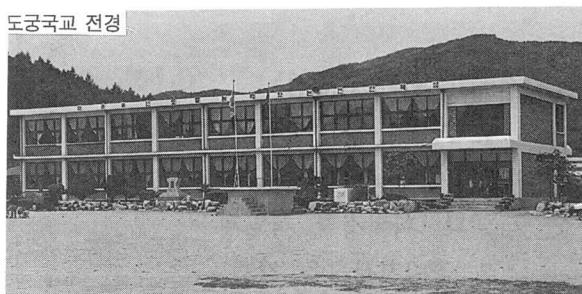
이를 소재지 별로는 다음과 같다.

〈「도척국민학교」 부설 유치원 개설〉

도척면 노곡리 222번지

1931년 3월 3일 개교

보유교실 1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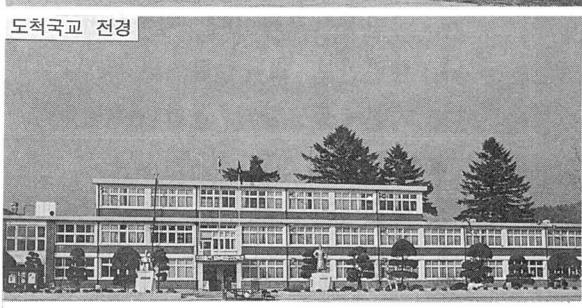


〈「도궁국민학교」 부설 유치원 개설〉

도척면 도옹리 128번지

1974년 3월 1일 개교

보유교실 6개



〈「광일중학교」〉

도척면 노곡리 240번지

1976년 12월 28일 개교

보유교실 6개

이외에 국민학교 부설 유치원과 유정리와 궁평리, 진우리 등 부락사설 유치원을 개설하고 있음.

1. 도척국민학교

소재지 : 도척면 노곡리 223

개설년월일 : 1931년 3월 3일

교장 :

역대교장 : 김련성, 이완성, 황인성, 오현옥, 염도순, 김명희, 이용명, 임상학, 안성원, 쇠순광, 이현상, 문경윤, 김창호, 정의효

第三篇 文 化

학 生 수 : 351명

교 직 원 수 : 16명

교 육 목 표

1. 나라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린이(도덕인, 애국인)
2.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건강인)
3. 스스로 공부하며 실천하는 어린이(능력인)
4.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는 어린이(과학인)

〈1987년도 노력중점〉

1. 기초교육의 충실
 - 가. 자율학습의 습관화
 - 나. 학력정착 책임제
2. 국민정신교육 강화
 - 가. 국민정신교육 9대 덕목실천
 - 나. 통일안보 교육강화
 - 다. 기본예절생활의 실천(인사잘하기, 고운말쓰기, 차례지키기)
3. 교직원 현직연수 철저
 - 가. 실험실기연수
 - 나. 교직교양연수

가. 연 혁

년 월 일	내 용
1931. 3. 3	도척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
31. 7. 10	" 개교
81. 9. 26	신관 4교실, 변소 1동 개축
82. 3. 5	조류장 설치
84. 11. 1	야외학습장 설치
86. 10. 9	충무공, 세종대왕상 건립
86. 12. 30	수세식 화장실, 교장실 신축
91. 9. 1	제21대 이복용교장 부임
91. 8. 27	컴퓨터 21대 설치
92. 2. 14	제59회 졸업식(총 4,214명)

92. 2. 29	본관 창틀교체(전면)
92. 3. 18	칼라TV 10대 설치
92. 3. 20	9학급 편성

나. 학교 총부지면적 - 3,409평

다. 총 학생 수

학년	1	2	3	4	5	6	계
학생수	43	48	54	56	52	49	302명

라. 교실 수 - 14개 교실

마. 역대 교장

대	이 름	대	이 름	대	이 름
1	다가하시 헤이시로	8	강 도 순	15	문 경 윤
2	곤도 세이꼬	9	김 명 휘	16	김 창 훈
3	기다무라 소라노스끼	10	이 용 명	17	정 의 효
4	김련성	11	임 상 학	18	하 완 용
5	이완성	12	안 성 원	19	최 영 규
6	황인성	13	최순광	20	박수안
7	오현옥	14	이현상	21	이복용

바. 역대 교감

부임년도	이 름	부임년도	이 름
1961~	최순광	1973~	신학현
1963~	이병두	1985~	윤용섭
1967~	김종배	1987~	이제룡
1969~	안명렬	1988~	곽영홍
1971~	김영룡	1991~	양도석

사. 총 졸업생 수-제59회, 총 4,214명

아. 학교건물시설 총면적-537.6평

자. 남길만한 수목 및 시설물

1) 남길만한 수목

은행나무 2, 느티나무 1, 전나무 5, 측백 1, 소나무 1, 향나무 10, 목련 1, 플러터너스 1

2) 남길만한 시설물

컴퓨터 21대, 복사기 1, 칼라TV 10대, 팩시밀리 1, 야외교실(등나무 金) 1

3) 자랑할 만한 사항

• 컴퓨터실 완비로 첨단과학교육 충실

• 과학실 완비로 첨단과학교육 충실

• 오랜 역사와 전통(1931. 7. 10 개교)

〈도척국민학교 부지 희사〉

(1) 서기 1947년 도척면 노곡리 223번지 도척국민학교 부지중 일부(150평)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학교주위, 울타리 등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상시 느껴 谷山延氏宗中代表 延龍熙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린 바 谷山延氏宗中에서 이 사실을 宗人們에게 傳하고 연씨종중에서는 이를 종중희의결의로 이 토지(田 150평)종중기금으로 매입하여 학교부지로 희사하였다. (延氏宗人們의 제언에 의함)

2. 도궁국민학교

소재지 : 도척면 도옹 1리 125번지

개설년월일 : 1972년 3월 2일

교장 : 이길선

역대교장 : 김영룡, 임정순, 박경선, 최용준,

학생수 : 182명 안내현

교직원수 : 10명

교육목표

1. 몸이 튼튼한 어린이

2. 마음씨 고운 어린이



도궁국교 교직원 일동

3. 생각하며 공부하는 어린이
4. 예절바른 어린이
5. 나라의 고마움을 아는 어린이

〈1987년도 노력중점〉

1. 도용어린이 자기관리(일기장 발간 활용)
2. 전교생 1인 1약기 연주기능 연마
3. 1학급 1특색 교육실천
4. 과학·산수 클럽조직운영
5. 교과별 학습방법에 의한 학습지도 실천

학 교 현 황

종 류 별	적 요
연 혁	1974년 3월 2일
총교지면적	8,986㎡
총 학 생 수	남 : 88명, 여 : 92명, 계 : 180명
교 실 수	교무실 1, 교장실 1, 교실 6, 총 8
총졸업생수	남 : 325명, 여 : 324명, 계 : 649명
학교시설물 총면적	교실 : 275평, 속직실 : 75평, 사택 : 13.6평, 화장실 5평

〈김완숙 교감선생님의 공적조서〉

김완숙 교감선생님께서는 본군 출신으로 일찌기 2세교육에 깊은 뜻을 두어 교직에 투신한 후 1990년 9월 1일부로 고향인 도궁국민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첫부임을 하시게 되었다.

통근이 원활한 대도시 인접학교의 선호 현상으로 말미암아 오지학교 교육을 항상 염려해 온 학교 중의 하나가 본교이다. 오시는 선생님마다 정들자 이별이 되는 바람에 이 지역 학구민들은 항상 장기근속 교사를 희망해 온 터였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고향인 도궁국민학교(교장 이길선) 발전에 개대하는 바가 크다”는 교육장님의 기대를 하나 더 보태어 본교에 부임케 하였다.

부임하신 후 무엇보다도 교육여건 조성의 시급함을 절감한 나머지 교내학습은 물론 가정학습까지 보살피기로 했다. 그리하여 동분서주 끝에 친지의 협조를 얻어 책결상

第三篇 文 化

150조, 멜로디언 19개, 피아노 1대, 오르간 1대, 도서 1,000여권을 지원받았다.

책걸상은 아동의 각 가정에 배부하여 가정학습에 열심케 했으며 악기류는 특별활동 교육에, 도서는 학급에 배분하여 독서교육에 힘쳤다. 피아노는 강당에 설치 상설용 및 아동들의 연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몇백만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교육청 보조 39만원과 체육진흥회장(김현식 씨)이 직접 경운기로 3일동안 협력하는가 하면 그외 학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80m여의 조경사업을 완료했다.

이러한 교감선생님의 혼신적인 노력으로 지역 및 교육청 당국으로부터 대단한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해빙기가 지나고 신년도에도 폐적한 교육환경조성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포부가 대단하다.

또한 그는 남궁역선생님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선생님은 「죽은 시체를 무궁화나무 밑에 묻어 무궁화나무의 거름이 되어달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1) 나라사랑의 일환으로 무궁화나무 200주를 군 산림계로부터 구입, 학교 진입로 및 담장 둘레에 식재하였다.

(2) 아동의 정서 순화교육으로 국화재배단지를 조성, 화단을 가꾸어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없었던 후문도 순수 철망을 구입해 설치하였으므로 학교가 안정되고 차분한 발돋움을 하고 있다.

수목에도 나무마다 시비와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 우람하고 줄기차게 잘 자라도록 가꾸어 나가며 잡초제거 등을 손수 실시하였다.

(3) 근무면에서 9시 출근을 8시면 학교에 출근, 오늘의 할 일을 찾아 근면성을 일깨우기도 하며 그의 자가용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함은 물론 아픈 중에 있는 아동을 병원 등 바쁜 일에 인도하기도 하여 지역사회의 칭송을 받고 있다.

(4) 아동 생활면에서도 아동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지며 지도하여 아동들이 교감선생님을 마치 부모와도 같이 친하려고도 한다.

또한 직원간에도 우애 화목하여 즐거운 지상천국의 학교로 꿈을 키우고 있다.

3. 광일중학교

소 재 지 : 도척면 노곡리 241-2번지

개설년월일 : 1981년 4월 23일

교 장 : 崔 凤 奎

역 대 교 장 : 최기영, 김정래

학 생 수 : 212명

교 직 원 수 : 15명

교 육 목 표

1. 굳센 체력과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
2. 풍부한 정서와 고상한 취미를 지닌 사람
3. 과학적 사고로 탐구하는 창의적인 사람
4. 공동체의식을 지닌 자주적인 사람

〈1987년도 노력중점〉

1. 기본생활 및 학습습관지도의 내실
2. 애향대별 꽃길 가꾸기
3. 교과별 책임학력의 진작
4. 독서교육의 충실

〈공립 도척유치원〉

소 재 지 : 도척면 노곡리 223

개설년월일 : 1982년 3월 1일

원 장 명 : 하완용(국교장)

교 사 수 : 1명

학 급 수 : 1

원 아 수 : 29명

가. 학교연혁

년 월 일	내 용
1976. 12. 28	광주동중 노곡분교 설립인가(6학급)
1977. 3. 5	광주동중 노곡분교 개교(2학급 105명 입학)
12. 30	교사(3칸, 104평), 숙직실, 화장실 신축
1978. 12. 30	교사(5칸, 158평) 신축

第三篇 文 化

1980. 2. 28	광주동중 노곡분교 제1회 졸업(남54명, 여51명, 계105명)
11. 30	교사(2칸) 신축
12. 10	광일중학교로 독립 인가(6학급)
1981. 3. 1	광일중학교 개교
3. 1	초대교장 최기영 취임
1981. 8. 22	교문준공
9. 10	담장 설치(160.6미터)
11. 2	우물급수대 공사
1982. 2. 12	제1회 졸업식(89명)
1983. 2. 10	제2회 졸업식(82명) (졸업생 누계 171명)
1984. 2. 12	제3회 졸업식(74명) (졸업생 누계 245명)
1985. 2. 11	제4회 졸업식(79명) (졸업생 누계 324명)
6. 20	운동장 2단 스텐드 설치(90미터)
1986. 2. 17	제5회 졸업식(84명) (졸업생 누계 408명)
1987. 2. 20	제6회 졸업식(78명) (졸업생 누계 486명)
11. 30	양호실(4, 5평) 증축
1988. 2. 16	제7회 졸업식(55명) (졸업생 누계 541명)
5. 15	교육지표탑(응지탑) 건립
1989. 2. 15	제8회 졸업식(75명) (졸업생 누계 616명)
12. 31	수세식 화장실 증축
1990. 2. 13	제9회 졸업식(65명) (졸업생 누계 681명)
10. 26	창고 신축
1991. 2. 13	제10회 졸업식(68명) (졸업생 누계 749명)
1992. 2. 13	제11회 졸업식(53명) (졸업생 누계 802명)

나. 학교 총부지면적-2,886평

다. 총 학 생 수-178명(1년 : 71명, 2년 : 49명, 3년 : 58명)

라. 교 실 수-1) 보통교실 : 5실
2) 관 리 실 : 2실

3) 특 별 실 : 3실

마. 역 대 교 장-1대 : 최기영 교장(1대 : 이석기 교감)
 2대 : 김정래 교장(2대 : 이원대 교감)
 3대 : 최봉규 교장(3대 : 정규용 교감)
 4대 : 박승빈 교장(4대 : 이국진 교감)
 5대 : 황원주 교장(5대 : 박종달 교감)
 (6대 : 최이집 교감)

바. 학교건물시설 총면적-1) 교 실 : 362평
 2) 창 고 : 13평
 3) 숙 직 실 : 22평
 4) 화 장 실 : 12평

사. 총 졸업생 수

(단위 : 명)

회	남	여	계
1	41	48	89
2	39	43	82
3	42	32	74
4	30	49	79
5	42	42	84
6	46	32	78
7	28	27	55
8	38	37	75
9	34	31	65
10	28	40	68
11	34	19	53
계	402	400	802

아. 현재 재직 교직원 (면지발간당시) (1992년 현재)

직 위	성 명	전공교과
교 장	황 원 주	농업
교 감	최 이 집	상업
교 무 주 임	박 장 수	국어
학 생 주 임	이 재 선	가정
교 사	김 선 희	과학
"	백 남 숙	국사
"	최 경 자	사회
"	박 문 혜	미술
"	우 제 경	음악
"	강 오 순	영어
"	육 심 랑	체육
"	박 용 순	기술
"	김 현 미	수학
"	박 미 정	영어
서 무 과 장	권 오 형	
기 사	유 복 용	
"	염 교 동	

자. 자랑스런 광일

1) 학습지도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일 아침 자율학습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매일 고사문항을 교사들이 출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풀도록 지도하고, 그 내용을 오후 자율학습을 통하여 다시 확인케 하여 학력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나) 학력부진아는 특별활동 시간에 별도의 반을 조직하여 매주 담당교사가 철저히 지도하여 기본학력의 배양에 총력을 기울임.

다) 광주군 수학경시대회, 각종 학력고사, 과학우수자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역사회의 신망을 얻음.

2) 생활지도면

학생들의 성품이 도시 학생들보다 순박하고 교사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는 기풍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학교의 학생들에 비하여 학생사고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특히 근래 2년간은 '무사고 학교'로 교육장의 내교시에 극찬을 받은 바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 와의 유기적인 상담활동으로 학생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3) 교육환경조성면

학생들의 정서생활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가)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80여종 수집하여 교재원을 조성함으로써 학습활동 시간에 실물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생들의 애향심을 북돋우는 효과를 거둠.

나) 사철 꽃피는 학교를 운영하여 월별, 계절별로 항상 꽃이 피도록 계획적인 화단관리를 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음.

다) 육성회와 어머니회의 후원으로 각종 시청각 기교재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라) 야외 벤치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갖춤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도움을 주는 한편 정서순화에도 교육적 성과를 올림.

永生高等公民學校가 廣一中學校로 昇格하기까지의 연혁

年 度	事 由
1949. 4. 27	영생고등공민학교 설립 인가(한국농민교육회 강습생 崔益善)
1949. 4. 30	崔益善 교장 취임
1951. 6. 25	6·25동란으로 휴교
1951. 1. 4	1·4후퇴로 2차 휴교
1953. 2. 16	崔益善 교장 사임
1954. 2. 16	학교운영난으로 도척면 의회에서 학교운영권 인수
1953. 3.	舊교장 崔益善댁내 학교에서 도척면 노곡리 241-2번지로 영생고등공민학교 신축 건립 기공함.
1953. 7. 20	崔益善 교장 재취임하였으나 본인의 직장(서울) 관계로 鄭七星 선생이 교장직 대행하였음.
1954. 8. 30	학교운영이 곤란할 뿐아니라 장래발전을 기하기 곤란함으로 재단법인 農民義塾 부속학교로 이양키 위하여 面議會·各里區長·學校師親會 및 이사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同日付로 농민의숙 부속교로 운영권 일체를 이양함.

1959. 5.	<p>舊敎舍를 철거하고 4학급 신축함.</p> <p>신축공사를 당시 수원거주 文正善 건축업자가 교실 4학급외 부속건물 등을 건축하였으나 당시 도척면민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건축비 분담할 길 없어 건축비 지불을 못한 관계로 당분간 (건축비 지불시까지) 학교운영권을 文업자에게 일임하였으나 제학교운영은 부실한 상태였고 따라서 면유지들이 회동하여 道學務課에 공립학교 설립인가를 위하여 진정한 보람으로 설립인가를 得하여 공립교로 개교케 되었으며 초기에는 곤지암 廣東中schools 분교로 시작하여 그후 정식으로 廣一中schools로 인정받아 1981년 정식으로 개교하다(설립인가시 李圭式 부지사의 功이 큼).</p>
1981. 6.	<p>교사건축업자 文正善은 도척교육사업을 위하여 前 건축비일체를 회사(未受領) 하다.</p>
1980.	<p>상림리 延正熙가 영생고등학교 당시 학교운동장의 협소함을 보고 노곡리 畦 800평을 운동장 부지로 회사하다.</p> <p>舊 敎舍는 공립교 인가와 동시 철거됨.</p>

〈廣一中學校 敷地買入 경위〉

광일중학교 현 부지의 前소유자를 상대로 당시 도척면장으로 재직한 申復鉉은 서울식품주식회사 사장 徐清澤에게 중학교 부지매매건을 상의하여 매매가격 일금 일백만원으로 합의하여 그당시 도척면 在京人事를 방문하여 찬조금으로 일금 팔십오만원과 면내 유지제위에게서 찬조 거출된 금액(총 일백만원)으로 매입대금을 청산후 즉시 토지이전등기를 마치고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에 상신하여 광일중학교가 설립 인가되었음(申復鉉 提言임).